

김정일 시대의 남북 군사협상행태 및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국방장관회담, 장성급군사회담, 군사실무회담을 중심으로

이성춘(동국대학교)

한반도는 현실적으로 정전상태, 즉 불안정한 평화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군사회담은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해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자극적인 활동 자제, 상호비방 중지 등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문제를 협의의 추진함으로써 비록 만족스럽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평화와 안정에 긍정적 기여를 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남북관계는 교착상태에 놓여 있지만 향후 남북한 당국 간 회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협상대응책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왜냐하면 북한 문제만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사회과학의 목적이 사회현상의 설명과 예측에 있다고 본다면 현 시점에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순수하게 한국의 군사대표단으로 구성된 인원이 북한 군부 대표들과 군사문제를 논의한 대표적인 군사협상으로 남북 국방장관회담(2회), 남북 장성급군사회담(7회), 군사실무회담(38회)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으로 판단한다.

군사협상 분야를 일반협상화하기 어려운 측면과 군사협상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 차이가 심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지만 그동안 군사협상 결과에 대해서 군사협상행태 및 결정 요인 평가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자료의 제한으로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북한의 대외적 입장을 공식 대변하는 대표적인 신문인 당 기관지 『로동신

문』과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의 군사협상 신문 보도내용을 참고해 분석한다면 좀 더 근본적으로 군사협상행태 및 결정 요인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김정일 시대 북한의 대남 군사협상행태 및 결정 요인에 대해 총체적 차원에서 분석·평가했으며, 특히 종합적인 분석틀을 통해 살펴본 결과 북한의 군사협상행태는 1차 결정 요인인 협상관, 협상목적, 협상전략은 변치 않고 있으며 2차 결정 요인인 협상전술, 협상의제, 협상상황은 1차 결정 요인에 의해서 동일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예상되는 각종 남북회담, 특히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안정을 제고시킬 수 있는 남북 군사회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향후 미래 지향적인 군사회담을 대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남북 국방장관회담,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군사실무회담, 군사협상의 언론반응, 협상행태 결정 요인

1. 서론

현재 남북한 간에는 대결과 불신이 지속되고 있다. 이제 이러한 불신과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대화의 자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장기적으로 남북은 화해와 상생의 미래를 향해 먼 길을 한 걸음씩 진행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과거 김정일 시대의 군사회담을 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외부세계와의 공식적인 협상은 북한의 변화와 지속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김정일 시대 군사협상의 대표적인 남북 국방장관회

담(2회), 남북 장성급군사회담(7회), 군사실무회담(38회)의 세 가지 협상¹⁾행태에 대해 비교·분석해보고자 한다. 분석틀을 통하여 북한 군사협상행태와 결정 요인을 살펴보면서 북한이 추구하는 협상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판단해보았다. 이러한 결론을 참조하여 미래 지향적인 군사회담을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군사협상 분야를 일반협상화하기 어려운 측면과 군사협상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 차이가 심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지만 그동안의 결과에 대해 군사협상행태 및 결정 요인 평가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자료의 제한으로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북한의 대외적 입장을 공식 대변하는 대표적인 신문인 당 기관지 『로동신문』과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의 군사협상 보도내용을 참고해 분석한다면 좀 더 근본적으로 군사협상 행태 및 결정 요인에 대해서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북한이 당-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로동신문』은 북한의 공식사회를 기록한 1차 자료”²⁾³⁾이기 때문이다.

군사협상행태는 협상관, 협상목적, 협상전략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작용에 의해 표출되므로 다요인 분석을 적용했다. 또한 이데올로

-
- 1) 세 가지 군사협상 외에 남북 군사분과위원회 회담(1992.3.13~1992.9.16)이 있다.
 - 2) 김일성은 “당사업방법에 대하여”라는 연설에서 “당은 당보를 통하여 전체 당원들에게 자기의 정책을 알려주며 행동방향을 지시하며 신호를 줍니다. 특히 당보의 사실은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의 결정과 의도를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기사입니다. 거기에서 당원들은 일상적인 투쟁방향과 지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라고 당보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제1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131쪽.
 - 3) “『로동신문』은 북한의 언론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로동당의 기관지로서 당의 노선과 입장을 밝히고 정책을 홍보하며 대중을 교양한다. 북한이 ‘당-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로동신문』은 북한의 공식사회를 기록한 1차 자료다.” 고유환,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 변화』(서울: 선인, 2006), 25~26쪽.

기적 편향에 의해 연구의 객관성 및 중립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2개의 군사협상에 대해 비교분석 방법을 함께 적용해 저해 요인을 제거하고자 했다.

각 장별 주요 내용은 제2장에서는 북한의 군사협상행태에 대해 고찰했으며 제3장에서는 북한의 군사협상행태의 결정 요인 및 분석틀을 제시했다. 제4장에서는 김정일 시대의 대표적인 남북 군사협상인 남북 국방장관회담,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군사실무회담의 배경, 추진 경과 및 남북 주요 제의내용, 북한 언론반응을 살펴보면서 북한 군사협상행태와 결정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 및 평가했다. 특히 군사협상 시 변치 않고 적용하는 주(主)결정 요인인 1차 요인과 협상별로 변화하고 있는 2차 요인이 협상행태에 어떤 영향을 초래했는지 고찰해보았다. 제5장은 결론사항으로 제3장에서 제시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제4장에서 군사회담별로 고찰 및 분석한 결과 1·2차 결정 요인이 어떻게 군사협상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종합적인 북한 군사협상행태를 제시하고 향후 우리의 군사협상 대응책을 제시했다.

2. 협상행태와 결정 요인 이론적 고찰 및 북한의 군사협상행태

1) 협상행태와 결정 요인

(1) 협상행태

협상행태는 협상자가 협상 과정에서 나타내는 것으로 협상관, 협상 목표, 협상전략, 협상전술, 협상의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협상행태는 협상과정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된다. 이러한 협상행태는 어떤 한 특정 요인 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해 특정행태로 표출된다고 할 수 있다.⁴⁾

2000년대 이후 표출된 북한의 주요한 군사협상행태는 협상주도권 장악, 합의사항 위반, 일방적 의제요구, 대화결렬 책임전가 등이 대표적인 행태이다.

(2) 협상행태 결정 요인

협상의 효과성을 좌우하는 협상행태 결정 요인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은 매우 난해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결정 요인은 협상자가 살고 있는 “사회의 문화와 수용하고 있는 규범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이다.”⁵⁾

협상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에 관해서 학자별로 관심과 연구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연구⁶⁾하고 논의해왔다.

북한의 다양한 협상행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이러한 협상행태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한다. 특히 군사협상은 일반협상과 달리 북한의 협상행태가 독특한 행태⁷⁾를 나타내고 있어 북한 국내 사정, 국제적 관계, 남북관계 등을 종합해 군사협상행태 결정 요인과 연계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다양한 결정 요인 중 북한의 군사협상행태에서 주로 나타나는 군사협상행태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4) 협상행태는 협상자가 협상 과정에서 표출하는 협상목표, 협상전략, 협상전술로 구성된다. 허문영,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통일연구원, 2005), 9쪽.

5) 이달곤, 『협상론』(과주: 법문사, 2005), 56쪽.

6) 주요 학자별로 연구된 협상행태 및 협상행태 결정 요인은 다음 표와 같다.

2) 북한의 군사협상형태

민족의 최대 비극이었던 한국전쟁 후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시작된 북한과의 협상이 역사적인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군사당국자 간의 본격적인 군사회담⁸⁾ 개최로 이어진 것은 분단이라는 상황에서 매우 진일보한 일이었다. 유엔사를 통해 간접적인 남북대화로 시작해 남북 간 직접적인 회담으로 이어진 군사회담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⁹⁾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구분	송중환	홍양호	허문영	스나이더	척다운스
협상 형태	① 개막단계 · 축제분위기 조성- 선제의와 유리한 회담환경 조성 등 ② 중간단계 · 회담촉진- 회담 상대방에 대한 압력 등 ③ 합의단계 · 최고지도자의 개입 - 합의 용어에 대한 전술적 모호성 유지 등 ④ 이행단계 · 합의사항 이행 협의에 소극적 반응 · 합의사항 일방적 해석으로 이행 요구 등	진의협상과 의사협상 협상전략 협상전술 국제규범과 협상규범 재량권의 한계 명분과 실리	협상목표 협상전략 협상전술	벼랑끝 전술 적의 단점이용 전술 상호주의, 동시성, 형식 대 내용을 강조하는 전술	원칙에 합의하기 합의 재해석 대화결렬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기
협상 행태 결정 요인	혁명적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협상관 북한의 정치문화 환경적응과 실리추구	협상관, 협상목적, 협상구조, 정치체제, 협상자, 상호관계 등	협상관 협상상황 협상능력	빨치산 게릴라전통, 주체사상 사회주의 혁명 모델 도입, 김일성우상화, 유교규범 등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기이한 전체주의적 정부형태

자료: 저자별 참고문헌을 참조해 필자 재구성.

- 7) 척다운스, 『북한의 협상전략』, 송승중 옮김(파주: 한울, 1999), 27쪽. 북한협상의 특징을 ‘비외교적인 모욕과 무례함’이라고 주장하면서 휴전협상, 판문점 군사정전위 회담 등에서 나온 북한대표의 욕설 등을 사례로 들고 있다.
- 8) 협상과 혼용되는 회담 용어로 이 논문에서는 협상에 포함해 사용했다.
- 9) 첫째는 정전협정 체결을 위해 유엔사가 한국을 포함한 참전국을 대표해 북한군

이 연구는 한국의 군사대표단¹⁰⁾으로 구성된 인원이 북한 군부 대표들과 군사문제를 논의한 경우로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최된 남북 국방장관회담,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군사적 뒷받침과 한반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장성급군사회담,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된 남북철도·도로 연결의 군사적 지원을 위한 실무 협의의 추진 차원에서 개최했던 군사실무회담¹¹⁾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이것은 남북 양측의 군사대표단이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군사문제만을 전담으로 협의한 실질적인 군사협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¹²⁾

군사협상¹³⁾이라 함은 군사책임담당자 및 군사실무자가 군사문제에 대해 협상을 통해 의제를 협의해나가는 과정으로 이 논문에서는 주로 남북 양측¹⁴⁾ 간에 군사책임담당자 및 군사실무자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군사문제 관련 사항을 협의했던 회담으로 한정했다.

및 중공군과 협상한 경우로서 정전협상, 군정위회의, 판문점 장성급회담이다. 둘째는 한국의 군을 포함한 정부대표단이 북한과 군사문제를 다루거나 정부차원의 대화 이후 군사대화도 결과를 마무리 지은 경우로서 1990년대 고위급회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2009 남북한 군사회담 자료집』(서울: 국방부, 2009), 3~4쪽.

- 10) 우리 측 회담 대표단 중에는 일반직 공무원(외교부, 건교부, 통일부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 11) 2000년 11월 28일~2003년 12월 23일까지 총 스무 차례 개최 이후 국방장관회담 및 장성급군사회담 관련 의제로 논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 12) 군사분과위원회 회담(1992.3.16~9.16)도 군사협상에 해당되지만 연구 목적상 2000년 이후 실시된 군사회담 위주로 분석했으며 군사분과위원회 회담은 이번 연구에서 제외했다.
- 13) 이미숙, “남북한 군사협상 과정의 발전단계에 관한 연구,” 『군사』, 제70호(2009), 275~276쪽. 군사협상은 협상 개념으로 볼 때 “쌍방 간의 군사책임자 및 군사실무자가 군사적 긴장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군사문제를 회담이나 전화, 서신 등의 방식에 의한 대화를 통해 협의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 14) 실제 과거 군사회담은 남북 양측 군사인원 외에도 유엔사, 중립국 인원, 정부대표단 등이 회의에 참석한 사례가 주요 군사회담이었다.

이번 연구는 기존의 다양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2000년 이후의 북한의 협상행태(negotiation behavior)¹⁵⁾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주도권 장악, 억지 주장, 합의사항 위반, 일방적 의제 요구, 대화결렬 책임 전가 등을 위주로 고찰해보았다. 물론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협상행태가 있을 수 있지만 북한 군사협상의 전반적인 추이와 협상의 변화사항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군사협상 시 표출되는 주요 행태들을 고찰해봐야 한다.

(1) 협상 주도권 장악

협상을 하면서 협상주도를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¹⁶⁾. 이는 북한이 협상을 일종의 투쟁 수단으로 간주하며,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협상의 진행 과정에서 모든 방법으로 협상을 주도하려 하기 때문이다.¹⁷⁾ 특히나 북한 측은 군사협상의 개막단계에서 만면에 미소를 띠고 분단조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는 강한 수사적 연설을 하고 우호와 친절의 제스처를 보이면서 회담일시, 장소, 의제 등 회담의 절차문제에 대한 북측안을 먼저 제안해 회담을 주도하려 한다.¹⁸⁾ 북한은 모든 군사협상 시 협상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대표단 구성은 물론이고 회담대표단의 이동수단, 이동경로, 기자

15) 홍양호는 협상목적과 구조(goal and structure)·협상환경(environment)·인식(perception)·행동패턴(pattern)·태도(attitude) 등이 협상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홍양호, “탈냉전시대 북한의 협상행태에 관한 연구”(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8쪽.

16) 김용호, “북한의 대화협상 행태 분석,” 『국제정치논총』, 제40집(2000년), 294쪽.

17) 홍양호, “탈냉전시대 북한의 협상행태에 관한 연구,” 233~234쪽.

18) 송중환, 『북한 협상행태의 이해』(서울: 오름, 2002), 167쪽.

단 포함 여부 등 회담 개최 과정에서 제기되는 사안마다 반대급부를 요구하거나 주도권 장악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¹⁹⁾ 니콜라스 에버스타트(Nicholas Eberstadt)는 “주체사상은 주도권 장악 제일주의”라고 좀 더 정확하게 정의했다.

(2) 합의사항 위반

회담기간 중 오랜 시간을 들여 양측이 합의한 사항을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위반했다. “남북한 간에 크게 합의를 본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등을 이행하는 북한의 태도는 자기들에게 유리하면 온갖 의미를 다 부여하면서 그 실천을 강조하고, 불리하면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언제 그러한 합의가 있었던가 하는 식으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행태라고 할 수 있다.”²⁰⁾

(3) 일방적 의제요구

북측은 협상의제를 선제안해 남측이 이에 동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협상행태는 구소련과 중국에서 습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소련은 희망하는 항목을 의제의 첫 부분에 위치하게 함으로써 상대 국가가 관심 있는 항목이 토의되기 전에 자국이 희망하는 항목을 먼저 토의, 확보하려는 것인데 이러한 공산권의 협상행태는 서방권의 일반적 전통과는 대비되는 것이다.²¹⁾

19) 문성득, “남북 군사회담 경험을 기초로 살펴본 북한의 협상전략,” 『한반도 군비통제』, 제47집(2010), 60쪽.

20) 송대성, “남북한 장성급회담과 군사적 신뢰 구축 전망,” 『한국군사』, 제19호, 267쪽.

21) 송종환, 『북한협상행태의 이해』, 176쪽.

(4) 대화 결렬책임 전가

협상 결과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하거나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하더라도 당초 기대와 달리 이용가치가 없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는 대화 상대방에게 대화 결렬책임을 전가²²⁾하면서 협상의 중단을 선언했으며, 의제 또한 이중성을 담고 있다.

3. 북한의 군사협상행태 결정 요인 및 분석틀

협상행태는 어떤 한 특정 요인이 협상행태로 나타나지 않고 여러 가지 구성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해 협상행태로 표출된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는 2000년 이후 군사협상행태에서 나타난 주요한 결정 요인²³⁾을 1차 요인과 2차 요인으로 구분했다. 1차 결정 요인은 북한이 모든 군사협상 시 적용하고 있는 주(主) 결정 요인이며 2차 결정 요인은 1차 결정 요인에 의해 협상상황과 연계해 동일하게 변하는 결정 요인이다.

1) 북한 군사협상행태 결정 요인(1·2차)

(1) 1차 요인

① 협상관

협상에 대한 기본 인식을 협상관이라고 하며 협상관에는 두 가지가

22) 문성묵, “북한의 대남군사협상 전략·전술,” 『국방』, 260호, 73쪽.

23) 군사협상행태의 주요한 결정 요인을 협상관, 협상목표, 협상전략, 협상전술, 협상의제, 협상상황으로 판단했으며, 학자들에 따라 달리한다.

있다. 타협과 양보를 통해 상충하는 이해를 조정해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기 위한 긍정적인 일반협상관과 협상은 화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수단을 통한 투쟁에 불과한 것으로 일방적 승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부정적 의미의 특수협상관이 있다. 북한은 남북협상을 “우리 인민의 최대 민족적 과업인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북조선 대표와 남조선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앉아서 의논하지는 것을 말한다”²⁴⁾라고 정의한다. 협상에 대한 북한의 사전적 정의는 서구 자유국가의 협상 개념과 특별히 다르지 않고 유사²⁵⁾하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대남전략 및 연방제 통일정책과 관련해 김일성 유훈을 받들고 있기 때문에 혁명적 대남관 및 협상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물론 남측과 서방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인식에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면서 냉전기와 달리 수세적 차원에서 공존을 지향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²⁶⁾

② 협상목표

일반적으로 서구 국가들의 협상의 목표협상²⁷⁾을 상호주의에 입각

24) 사회과학원, 『정치용어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117쪽.

25) 협상이란 국가들 사이의 분쟁문제를 힘의 방법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용하는 외교적 방법을 말한다. 협상의 방법 중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것은 분쟁 당사국들이 평등한 입장에서 진행되는 직접적인 외교적 교섭, 즉 회담의 방법이다. 이외에도 제삼국이 중개자 또는 주선자로 되어 분쟁 당사국들을 협상시키기도 하며 또는 국제중재재판소나 국제재판소를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 『대중정치용어사전』(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120쪽.

26) 허문영,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113~116쪽.

27) 협상목표와 관련해 아이클(C. Ikle)은 다섯 가지로 분류했다. 첫째, ‘연장협상(Extension agreement)’, 둘째, ‘정상화협상(Normalization agreement)’, 셋째, ‘재분배협상(Redistribute agreement)’, 넷째, ‘혁신협상(Innovation agreement)’, 다섯

해 흥정을 통해 주고받는 상업주의적 절충 과정으로서 현안 문제의 해결 수단으로 보는 데 비해 북한은 투쟁의 완전한 승리 추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은 노동당 규약 전문²⁸⁾에서 알 수 있듯이 한반도 공산화 통일이 최종 목적이며 탈냉전 이후 국가목표인 사회주의 체제유지를 국가 목표로 병행 추진하고 있다.²⁹⁾ 최소한 2000년대 이후에는 2개의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되 한반도 공산화 통일보다는 체제유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탈냉전 이후에는 우선적으로 체제유지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협상을 대남전략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③ 협상전략

협상전략 또한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³⁰⁾ 협상자 태도에 따라 기본 전략과 응용 전략³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외에도 알렉산

쨌 ‘부수효과협상(side-benefits)’. 프레드 C. 이클레, 『협상의 전략』, 이영일·이형래 공역(서울: 한얼문고, 1972), 38~39쪽.

28)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 북한 노동당 규약(2010년 9월 28일 당 대표자 회의 시 개정).

29) 이미숙, “북한의 남북한 군사협상 결정 요인 고찰,” 『국방연구』, 제53권 제1호(2010), 74쪽.

30) Dean G. Pruitt, “Strategic Choice in Negotiation,”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27, no. 2(Nov. 1983), pp.172~185.

31) “기본 전략은 첫째, 문제해결전략(협력전략: problem solving strategy, collaboration strategy), 둘째, 경쟁전략(대립전략: contending strategy, competitive strategy), 셋째, 양보전략(순응·굴복전략: yielding strategy, accommodative strategy), 넷째, 무행동전략(inaction strategy)이 있으며 응용전략은 첫째, 혼합전략(mixed strategy), 둘째, 맞대응전략(TFT: tit for tat strategy), 셋째, 그리트전략(GRIT:

더 조지(Alexander George)는 위기관리 전략을 두 가지³²⁾로 구분했다. 많은 학자들이 북한의 협상전략이 서구 국가의 협상전략과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며 협상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 단계별로 경쟁전략 및 체제생존과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기 위한 문제해결전략을 사용하는 혼합전략을 주로 사용한다.

(2) 2차 요인

① 협상전술

협상전술은 협상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기술 및 방법을 의미하며 협상전략은 기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나 협상전술은 협상상황, 또는 협상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다.

월(James A. Wall)은 합리성 개념을 적용해, 협상전술을 합리적 전술(rational tactics)과 비합리적 전술(irrational tactics)로 구분³³⁾한다.

척 다운스³⁴⁾는 북한의 협상은 독특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기이한 전체주의적 스타일에 기인한 북한만의 협상전술을 제시했다. 협상에 임하는 협상전략에 따라 다양한 협상전술이 채택되지만

gradual reciprocation in tensionreduction)이 있다.” Roy J. Lewicki and Joseph A. Litterer, *Negotiation*, p.120.

32) Alexander L. George, “Strategies for Crisis Management,” in Alexander L. George(ed.), *Avoiding War: Problems of Crisis Management* (Boulder: Westview Press, 1991), pp.372~393.

33) James A. Wall Jr., *Negotiations: Theory and Practice*, pp.65~67.

34) 대화의 전제조건 내세우기, 협상 상대의 관심을 돌릴 만한 사건 일으키기, 상대방을 함정에 빠트려 궁지에 몰아넣기, 현안 의제를 토의할 때 과거 결론을 들고 나오기, 자신의 목표를 먼저 협상해야 한다고 우기기 등 11개 항을 제시했다. 척다운스, 『북한의 협상전략』, 37~38쪽.

북한은 공격적 전술, 문제해결 논쟁 전술, 경쟁적 논쟁 전술을 주로 구사한다.

② 협상의제

남북한 군사협상은 분석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북한의 국내 사정, 남북관계, 국제적인 환경 등을 배경으로 개시되었다. 2000년대 이후 군사협상 의제는 외형상으로는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군사협상 의제를 주요 협상의제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북측은 제안한 협상의제³⁵⁾와 의제 내용의 이중성³⁶⁾을 보여주며 의제별 협상 순서도 남북 양측이 상이하게 주장³⁷⁾했다. 특히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북측의 군사협상 의제를 면밀하게 분석해보면 협상행태의 본질에 한발자국 접근할 수 있다. 본질적인 의제가 군사협상에서 다루어져야 함에도 체제유지 및 경제적 실리를 위한 군사협상 의제로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북측은 본질적인 군사협상 의제에 대해서는 회피했다는 사실이다.

③ 협상상황

협상 당사국이 어떠한 국내외적 정세와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의미한다. 북측의 경우 협상상황은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해 추진해 온 ‘3대 혁명역량 강화노선’을 적용한 것이다. 군사협상의 특수성을 고려해 군사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협상상황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35) 대표적인 의제는 철도·도로연결과 서해 해상 우발충돌방지, 선전중지·수단제거, 군축과 군사적 신뢰 구축 관련 내용 등이다.

36) 이미숙, ‘남북한 군사협상 의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263~269쪽.

37) 남측은 ‘선(先)군사적 신뢰 구축’을 북측은 ‘선(先)군축 후 군사적 신뢰 구축’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국내 사정, 둘째, 남북관계, 셋째,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세에 의해 협상행태는 변화할 것이다. 물론 협상상황의 변수들은 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나 군사협상의 특수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선정 제시³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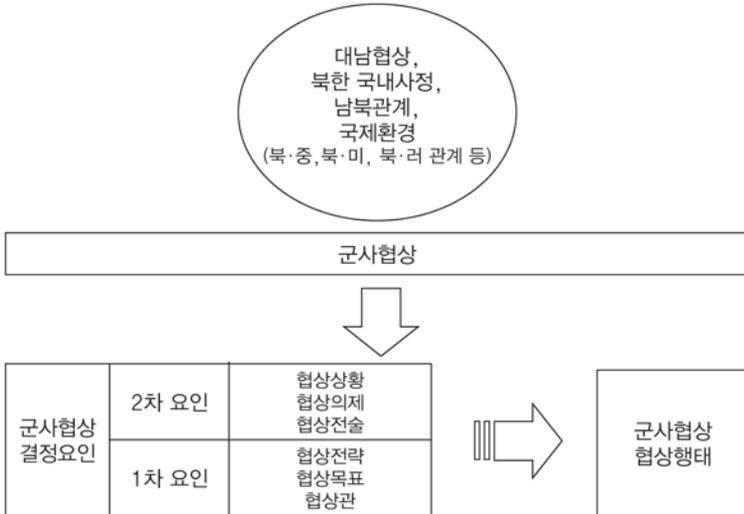
북측은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남 군사협상과 군사도발을 병행해 구사하고 있다. 이것은 군사협상에 이어 군사도발을 대남전략의 또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2) 북한 군사협상행태 분석틀

군사협상 결정 요인 중 1차 요인은 협상행태에 기본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 결정 요인으로 북측에서 변하지 않고 있는 협상관, 협상목적, 협상전략으로 한정했고, 2차 요인은 군사협상이 개최될 때마다 협상별로 1차 요인에 의해 변화가 있는 협상전술, 협상의제, 협상상황으로 구분해 고찰해보았다. 물론 이와 반대되는 개념의 틀 및 다양한 분석틀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개최된 국방장관회담, 장성급군사회담,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나타난 군사협상행태의 결정 요인을 규명해보고 이러한 결정 요인들이 협상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이에 따른 종합대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구성한 북한 군사협상행태의 분석틀은 <표 1>과 같다.

38) 군사협상행태 결정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협상상황 변수의 순위는 협상정책 판단 시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우선순위를 선정했으나 실제적으로는 동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표 1> 북한 군사협상의 분석틀



4. 김정일 시대의 군사협상행태 및 결정 요인 분석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순수하게 한국의 군사대표단으로 구성된 인원이 북한 군부대표들과 군사문제를 논의한 남북 군사회담은 국방장관회담을 정점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문제를 다루는 장성급군사회담, 군사실무회담이 가장 대표적인 군사회담이다. 이러한 군사회담은 연기와 일시적인 중단을 거듭하면서 지속되었으며 군사협상의 행태를 분석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전달해주고 있다. 북한의 대표적인 군사협상을 통해 협상행태가 어떤 결정 요인에 의해서 변화되고 있는지 군사회담별로 추진 배경, 추진 경과, 북한 언론반응, 협상행태, 결정 요인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특히나 이시기는 김정일 역시 군을 통한 위기관리체제를 가동시키면서 경제위기 국

면을 돌파했던 시기이다. 이 과정에서 선군정치는 북한체제를 운영하는 정치방식으로 자리매김했다.³⁹⁾ 북한의 언론반응 자료는 당 기관지인 『로동신문』과 내각신문인 『민주조선』의 보도내용과 연계해 분석해 보았다.

1) 남북 국방장관회담

(1) 제1차 남북 국방장관회담(2000.9.24~26)

① 추진 배경

1998년 2월 출범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하고 남북 간의 평화공존을 도모하며 나아가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했다.

마침내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협력이 있었으나 군사당국자의 회담은 미비했다.

이후 제반 분야에 균형된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북한 측에 남북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문제를 강력히 제기⁴⁰⁾했다. 그 결과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쌍방 군사 당국자들 간의 회담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갖도록 협의한다는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

39) 김철우, 『김정일 장군의 선군정치』(평양: 평양출판사, 2000), 225쪽.

40)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긴장 완화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군사당국자 간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북측에 강력히 제기”했다. 문성묵,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 군사회담 평가,” 『군사논단』, 제27호(2001), 64쪽.

② 추진 경과 및 남북 주요 제의내용

북한 측은 9월 13일 인민무력부장이 판문점을 통해 국방부장관에 게 보낸 서한에서 회담 개최에 동의하며, 의제로는 경의선 문제를 논의하고 장소는 홍콩(또는 베이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우리 측은 9월 14일 답신을 통해 제1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홍콩에서 개최하고,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경의선 철도연결·도로개설 등 남북교류협력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필요한 군사 분야 지원 문제와 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화 설치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 및 긴장 완화와 관련된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고자 제의했다.

2000년 9월 17일 북한 측은 사증교섭 등을 위한 시일이 촉박함을 이유로 회담장소를 제주도로 할 것을 수정 제의하면서, ‘6·15 남북공동선언’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먼저 우리 측으로 오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남측은 북측의 제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냄으로써 역사적인 남북 국방장관회담 개최가 최종적으로 합의되었다.

분단 이래 처음으로 판문점을 통해 군사분계선을 넘어 한국 측으로 내려왔으며, 회담은 2000년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제주도에 서 개최되었다.

③ 북한 언론 반응

북한의 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제1차 남북 국방장관회담 관련 보도를 총 1회 실시했으며 특별하게 2000년 9월 27일 국방장관회담 공동보도문을 1면 우측에 박스기사⁴¹⁾로 게재해 가장 많은 주목을 받

았음을 알 수 있다. 모든 군사회담 보도는 『로동신문』에서는 4면에 크기는 2단에서 5단까지 중요성을 고려해 게재했는데 1면 박스기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업적⁴²⁾을 드러내기 위한 매우 특이한 경우로서 군사협상 목표와 선전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반응이었다.

『민주조선』에서는 『로동신문』과 동일하게 1회를 게재했으나 3면에 박스기사로 처리했다.

④ 협상행태 평가 및 결정 요인 분석

가) 협상행태

군사협상에서 주요하게 나타나고 있는 협상행태로서 협상주도권 장악을 위해서 협상 초기부터 국방장관회담 의제와 거리가 먼 합동군사연습 중지 등 억지주장 및 일방적 의제를 요구했다. 합의사항 위반과 관련해서는 제2차 회담을 2000년 11월 중순에 북측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나 무응답으로, 2002년 11월에는 ‘행정상의 이유’로 회담에 응할 수 없다는 모호한 입장으로 개최가 무산되었다. 당시 북측이 제기한 의제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타결되지 못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회담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한다.⁴³⁾

북측은 2차 회담 결렬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기 위해 주적개념을 문제 삼아 거부했다.

4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장과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사이의 회담과 관련한 공동보도문” 형식으로 1면 우측에 박스기사로 게재되었다. 『로동신문』 2000년 9월 27일.

42) 문성묵 면담(2012년 5월 23일).

43) 문성묵, “남북 군사회담 경험을 기초로 살펴본 북한의 협상전략,” 56쪽.

나) 협상행태 결정 요인 분석

기존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군사협상관은 북한이 협상을 투쟁의 한 수단이며 투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궁극적으로 승리를 추구해야 하며 협상은 장기적 거래라는 공산국가의 협상관, 특수협상관에 의거 군사협상을 진행했다.

군사협상 목표는 외형적으로는 재분배협상을 추구하며, 이는 체제 보존을 위한 시간별기와 경제난 해결을 위한 실리확보에 있다고 판단된다. 국방장관 군사회담이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군사적 뒷받침 사항으로 체제유지 및 경제난 해결을 위한 제반사항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종전 북한 측은 군사협상의 전략으로 협상에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주로 기본 전략 중 경쟁 전략을 지속했으나 회담에서는 경쟁전략 및 문제해결전략을 사용하는 혼합전략을 구사했다. 6·15 공동선언 이행에 저해를 주는 군사행동, 즉 한미합동군사연습 등에 대해 회담 전 강경하게 중지를 주장했다.

그동안 군사협상전술은 냉전시대 협상전술인 강경한 공격전술, 경쟁적 논쟁전술, 회담과기전술 등을 지속했으나 제1차 회담 시에는 타협전술, 일괄타결전술 등 문제해결을 위한 논쟁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최초 회담 시 변화된 모습으로 포장해 김정일 체제유지와 경제난 해결을 위한 고도의 협상전술로 사용했다.

북측은 ① 6·15 공동선언 이행에 방해를 주는 군사행동 금지, ② 민간인의 왕래와 교류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문제, ③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개방해 남북관할구역으로 설정하는 문제 등을 협상의제로 하자고 제의했다. 북측에 유리하면서 체제유지와 관련이 있는 한미합동군사연습 중지 등을 첫 번째 의제로 선정한 것은 의제

내용의 이중성을 보여준다.

1998년 북한은 최악의 체제위기 국면에서 벗어나⁴⁴⁾고 있었으며 남북관계는 2000년 3월 9일 베를린 선언 및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을 합의해 화해·협력의 시기에 접어들었다. 국제관계는 대미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접근⁴⁵⁾해 북·미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되는 상황을 맞았지만 중단되고 말았다. 또한 대일수교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군사적 뒷받침사항으로 협상개시 및 체제유지 관련 의제선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2)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2007.11.27~29)

① 추진 배경

2007년 8월 5일 남북 양측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고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노동당 당비서 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 정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⁴⁶⁾을 발표했다.

44) 북한은 1997년에 엄중한 전쟁위험이 제거되었다고 주장했다. “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새해에 총진군을 다그치자.” 『로동신문』 1998년 1월 1일.

45) 2000년 10월 김정일 위원장의 특사인 조명록의 워싱턴 방문, 북·미 공동코뮤니케 발표,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평양방문 등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이 있었다.

46)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남한과 북한 최고 지도자들의 회담이다. 남한의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회담을 하여 6·15 공동선언의 적극 구현, 한반도 핵(核) 문제 해결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 추진,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적극 활성화, 이산가족 상봉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며 흔히 10·4 남북정상선언 또는 2007 남북정상선언으로 불린다.

‘10·4 선언’ 3항의 명시된 사항에 의거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하기 위한 국방장관회담을 2007년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 송전각 초대소⁴⁷⁾에서 개최했다.

② 추진 경과 및 남북 주요 제의내용

2차 회담은 1차 회담 후 약 7년여 만에 남북 군사적 신뢰 구축은 물론 남북경협 확대를 위한 군사적 보장 장치가 시급한 상황하에서 남북 간 군사 분야 협력증진에 합의,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가) 제1차 전체회의(11.27)

남측은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과 서해 해상에 공동 어로구역을 설정하고 평화수역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갈 것을 설명하면서 충돌방지를 위한 개선조치의 마련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수송, 남북관리구역 통행절차 개선, 북한 측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 이용, 서울~백두산 직항로 등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조치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제의했다.

특히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무력 불사용 원칙의 준수 및 종전선언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남과 북 군사당국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47) 북한 측 송전각 초대소는 국방위원회에서 직접 관리하는 외빈 접대소로 대동강 백화원 초대소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 측 정부 당국자에게는 최초로 공개되었다.

나) 제2차 전체 회의(11.28) 및 종결 회의(11.29)

북한 측은 서해 해상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설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해주특구, 공동어로, 한강하구 등 다른 문제들도 해결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우리 측은 현 NLL을 인정하는 조건하에서 공동어로구역을 먼저 설정하고 향후 평화수역으로 확대 발전하자고 제안하고, 우선적으로 서해에서의 긴장 완화를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상 선언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쌍방은 여섯 차례의 실무대표접촉을 통해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상호 입장을 조율하고, 총 7개항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국방장관회담 합의를 채택했다.

제3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은 2008년 중 적절한 시기에 개최하기로 했다.

③ 북한 언론 반응

『로동신문』은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 관련 보도를 총 3회 실시했으며 첫 번째 기사는 1차 회담과는 다르게 회담 다음날 4면에 2단 기사로 남측대표단 사진과 함께 도착사실을 게재⁴⁸⁾했다. 신문 좌측에는 회담이 열렸다는 기사도 함께 게재해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군사회담 보도내용 중 사진을 게재한 유일한 군사회담이다. 두 번째 기사는 회담 다음날인 11월 28일자 4면에 5단 기사로 군사회담이 개최된 사실⁴⁹⁾과 함께 북측 단장의 기조발언 소개와 10·4 선언 이행

48) “북남 인민무력부장급회담에 참가할 남측대표단 도착,” 『로동신문』 2007년 11월 28일.

49) “제2차 북남 인민무력부장급회담이 열렸다,” 위의 신문, 2007년 11월 28일.

및 이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북한 측의 원칙적인 입장과 실천사항을 제시했다. 기초발언 내용 중에는 주적관과 같은 적대감 조성 중지, 심리전 중지에 관한 쌍방향의 철저히 이행 등 기존의 우선 양보요구 및 불가사항 요구행태의 반복전술이 잘 드러나 있다. 세 번째 기사는 회담이 종료된 다음날 11월 30일자 4면에 3단 기사로 회담 종료 사실을 게재⁵⁰⁾했으며 기사 내용 중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눈앞의 작은 것만 보고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큰 것을 보지 못한다면 력사 앞에 엄중한 죄를 짓는 것으로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의미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쌍방의 영해권 존중 방향에서 재설정하자는 북측의 일방적 의제요구 및 협상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내용으로 판단된다.

『민주조선』에서는 『로동신문』과 동일하게 3회를 게재했으며 3면 및 4면에 게재했다.

④ 협상행태 평가 및 결정 요인 분석

가) 협상행태

협상주도권 장악을 위한 합의서 문안 조율을 위한 군사실무회담(3회 개최)에서부터 주적관 포기, 심리전 중지 등 억지주장을 했으며 『로동신문』에 게재된 바와 같이 인민무력부장의 협박성 발언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2000년 1차 회담 종료 후 2차 회담을 위한 공동보도문(안) 협의 및 회담일자 잠정 및 원칙적 회담 개최 합의사항도 전면 무시해 제1차 회담 후 7년여 만에 제2차 회담이 개최될 수 있었다.

50) “제2차 북남 인민무력부장급회담이 끝났다.” 위의 신문, 2007년 11월 30일.

일방적 의제 요구면에서는 NLL를 무력화하기 위한 서해경계선 협의 주장 등이 북측이 유리한 의제를 선정해 요구한 대표적 사례이며 제3차 회담은 2008년에 적절한 시기에 개최하기로 했으나 남측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나) 협상행태 결정 요인 분석

군사협상 협상관은 협상 초기단계에서부터 1차 협상과 동일하게 특수협상관에 의거 군사협상을 진행했다. 2002년 신년공동사설에서 ‘민족공조’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남북관계 진전을 거듭 강조⁵¹⁾하고 2003년에는 민족공조 실현은 남북관계 발전에 필연적인 요구라고 주장하는 등 화해무드의 남북관계에서 기존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했지만 ‘주적’문제를 제기하면서 “전쟁의 길을 택하려는 무모한 흥심의 발로로 될 뿐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변화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제1차 회담 후 약 7년이 지났지만 군사협상 목표는 동일하게 외형적으로는 재분배협상을 추구했으며, 이것은 북측이 군사협상을 체제보존 및 경제난 해결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질적으로 대남협상행태에는 변화가 없었다.⁵²⁾

군사협상의 전략으로는 동일하게 혼합전략을 사용했다. 북측은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 두 번째 『로동신문』 기사에서 기조연설간 제시한 “협력교류를 위한 그 어떤 불순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으로 약용하려는 기도는 사전에 짓부셔버리는 것이 우리 군대의 원칙적 립장이다”⁵³⁾라고 하면서 최초 강경전략에서 NLL무력화와 종전선

51) 위의 신문, 2002년 1월 1일.

52) 문성묵 면담(2012년 5월 23일).

53) 『로동신문』 2007년 11월 28일.

언 관련사항 등 체제유지에 필요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해결 전략을 혼합적으로 구사했다.

군사협상전술은 전제조건제시 전술, 반복제의 전술 등을 지속했으나 논쟁전술의 한 분야인 문제해결을 위한 논쟁전술을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NLL무력화 및 재설정을 집요하게 요구했던 북측은 남측의 확고한 입장에 당황했다.

북측의 협상의제는 ① 주적관 포기, 심리전 중지, 교전규칙 등 제도적 장치 재정비, ②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쌍방의 영해권 존중 방향에서 재설정, ③ 해외로부터 무력증강과 외국군과의 합동군사연습 중지 등 체제유지와 관련이 있으면서 북측에 유리한 의미가 함의된 의제로 선정했다. 특히 북측은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 두 번째 『로동신문』 기사에서 “주적관이나 주되는 위협론과 같은 적대감 조성을 중지” 등을 주장해 또 한 번 의제 내용의 이중 잣대를 보여주고 있다.

협상상황으로는 2007년은 북측 내부적으로도 신년사⁵⁴⁾에 언급했듯이 “선군조선의 일대기를 열어나가자”고 강조하고 있었으며 마카오 BDA 동결자금이 해제되어 김정일의 통치 자금면에서도 숨통이 열리고 있는 시기였다.

남북관계는 2007년 10월 2~4일까지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10·4 선언을 발표로 다시 한 번 남북관계는 호기를 맞고 있었다.

국제관계면에서 미국은 2007년 3월 19일 BDA 자금 해결 원칙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으며 6차 회담도 제5차 6차회담 3단계 회의와 제6차 6차회담 2단계 회의가 개최되어 북·미관계는 다시 회복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북·중관계도 2005년 2월 핵 보유선언 및 2006년 7월 미사

54) “승리의 신심 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위의 신문, 2007년 1월 1일.

일 발사와 10월 1차 핵실험 강행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10·4 남북정상선언 이행의 군사적 뒷받침사항으로 협상개시 및 체제유지 관련과 경제난 해결을 위한 활로개척으로 군사 협상을 활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1) 추진 배경

2002년 6월 29일 제2차 연평해전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한반도에 조성된 남북화해협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했다.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군사당국자 간의 본격적인 협의를 하기 위해 남북 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기존의 남북 군사실무회담과는 별도로 쌍방 군사당국자 간 회담을 개최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04년 2월 12일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장성급군사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했으나 무응답으로 일관하던 북측이 2004년 5월 7일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군사당국자회담을 개최한다는 데 재합의했다. 회담 개최 직전까지 수석대표 계급문제로 진통을 겪은 끝에 각기 1성급 장성을 수석대표⁵⁵⁾로 하는 회담대표단 명단을 교환해 회담이 개최되었다.

55) 장성급군사회담 수석대표의 계급을 1성급 장성으로 합의했으나 3차 회담부터 7차 회담까지 북측에서 2성급 장성인 김영철 인민무력부 중장이 단장으로 회담에 참석했다.

① 제1~2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금강산: 2004.5.26/ 설악산: 2004. 6.3~4)

제1차 회담에서 남북 양측은 서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와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쌍방의 입장을 교환했으며 북측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수단을 제거하는 문제가 절박한 과제라고 하면서 이 문제부터 협의할 것을 주장했다.

제2차 회담에서 북측은 1차 회담에서 제기한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선전수단을 제거하는 문제가 절박한 문제라고 반복 주장했다.

2004년 6월 4일 남북 쌍방은 우리 측이 제기한 ‘서해 충돌방지 문제’와 북측이 제기한 ‘선전활동 중지 및 수단제거 문제’를 상호주의적 차원에서 일괄 타결해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해 발표시켰다.

가) 북한 언론 반응

『로동신문』은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관련 보도를 총 14회 실시했으며 기본적인 보도방법은 회담 개최 다음날 “북남 장성급군사회담이 열렸다”라고 보도하고, 이어서 회담 종료 다음날 “북남 장성급군사회담이 끝났다”⁵⁶⁾라고 보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1~2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에서는 회담 종료 다음날 각각 1회씩 총 2회만 보도했다.

첫 번째 기사는 제1차 회담 종료 다음날 4면에 3단 기사⁵⁷⁾로 군사

56) 장성급군사회담에 대한 『로동신문』 보도방법, 제7회 장성급군사회담, 『로동신문』 보도내용 참조.

회담이 개최된 사실 및 북측 단장의 기조발언 소개와 함께 전방 지역의 선전중지 및 선전수단을 제거해야 한다는 기존의 반복 주장 내용을 게재했다. 이것은 군사협상의 대표적인 우선양보요구 및 불가사항 요구형태의 의제를 제시하는 반복전술을 잘 나타낸다.

두 번째 기사는 2차 회담 종료 다음날 4면에 3단 기사⁵⁸⁾로 군사회담이 개최된 사실과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를 게재했다.

『민주조선』에서는 『로동신문』과 동일하게 2회를 게재했으며 첫 번째 기사는 3면에 4단으로 두 번째 기사는 3면에 3단 크기로 게재했다.

나) 협상행태 평가 및 결정 요인 분석

(가) 협상행태

협상주도권 장악을 위해 최초단계에서부터 북측은 기조발언 시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그 수단들을 제거하는 문제가 절박한 과제라고 하면서 이 문제부터 합의할 것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또한 2003년 6월 29일 제2차 연평해전⁵⁹⁾을 언급하면서 “북남관계

57) “제1차 북남 장령급군사회담 진행” 기사로 4면에 게재되었다. 위의 신문, 2004년 5월 27일.

58) “제2차 북남 장령급군사회담 진행” 기사로 4면에 게재되었다. 위의 신문, 2004년 6월 5일.

59)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 2척에 대한 퇴거작전 중 북한 경비정의 선제 기습공격에 우리 해군 경비함정이 대응 사격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한 해상 교전이다.

가 대결관계로 되돌아갈 뻔했던 불미스러운 과거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⁶⁰했다. 이러한 기초발언은 처음부터 협상과 관련해 ‘기싸움의 연속’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합의사항 위반사항으로는 민간인들이 임의로 군사분계선 지역 밖에서 전단 살포와 관련해 억지주장을 하면서 통행 제한 조치를 취했다.

일방적 의제 요구면에서는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선전활동 중지 및 수단제거 문제와 서해 해상 충돌방지에 관련된 의제를 양측 동의 없이 우선적으로 먼저 협상할 것을 요구했다.

대화결과와 관련해서는 남측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사전 기초발언 시 회담 상대방에 대한 압력 차원의 내용을 언급했다

(나) 협상행태 결정 요인 분석

군사협상 협상관은 1·2차 국방장관회담과 동일하게 특수협상관에 의거 군사협상을 진행했다.

군사협상 목표는 외형적으로는 재분배협상을 추구하고 근본적인 요인은 변화가 없었다.

군사협상의 전략으로는 동일하게 응용전략인 혼합전략을 사용했다. 북측은 장성급군사회담 첫 번째 『로동신문』 기사에서 기초연설간 주장한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선전 중지 및 그 수단들을 제거하는 문제를 우선”하는 최초 강경전략에서 체제유지에 필요한 군사분계선 지역의 심리전 문제와 서해 해상의 NLL을 무력화하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해결 전략을 혼합적으로 구사했다.

60) 제1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시 북측단장 안익산 소장 기초발언 주장 내용이다. 위의 신문, 2004년 5월 27일.

군사협상전술은 체제유지와 대남적화와 관련해 논쟁전술의 한 분야인 문제해결을 위한 논쟁전술을 사용하고 있다.

북측의 협상의제는 ①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제거하는 문제, ② 서해 해상에서 충돌 방지 문제 등 체제유지와 관련이 있으면서 북측에 유리한 의제로 선정했다. 특히 북측은 회담 첫 번째 『로동신문』 기사에서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⁶¹⁾고 주장해 내부적으로 체제유지 및 NLL 무력화라는 의제 내용의 이중 잣대를 보여준다.

2004년은 북측 내부적으로 결속력을 강조하면서 신년사⁶²⁾에 언급했듯이 “당의 령도 밑에 강성대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 공세를 벌려 올해를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고 강조했다.

2003년 노무현정부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이었던 ‘정경분리’에서 벗어나 핵문제와 교류협력을 사실상 연계⁶³⁾시키고 이라크 전투병 파병, 주한미군 재배치 협력 등 한미동맹 강화에 치중한 탓으로 남북관계는 경색되었으나 2004년에는 회복 호기를 맞았다.

국제관계면에서 미국은 2000년 초 부시행정부 건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2004년에는 외향적으로는 정상적인 북·미 관계를 유지했으며, 특히 2월 11일에는 북·미 미군유해 송환 재개에 합의했다. 북·중 관계

61) 위의 신문, 2004년 5월 27일.

62) “당의 령도 밑에 강성대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 공세를 벌려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발표, 위의 신문, 2004년 1월 1일.

63) 2002년 10월 미국이 우리늄핵무기 개발 의혹을 제기하자 북한은 협상을 원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무시한 채 11월 14일 북·미 기본 합의 중 거의 유일하게 이행 중이던 중유 공급을 중단했다. 김진환, “북한의 체제위기와 대응전략: 개혁과 선군의 병행”(동국대학교 사회학 박사학위논문, 2008), 323쪽.

의 특이사항으로는 4월 19~21까지 김정일이 중국을 비공식 방문한 것이다.

② 제3~4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통일각: 2006.5.16 ~18/ 평화의 집: 2006.3.2~3)

제3차 회담은 통일각에서 개최되어 출퇴근 형식으로 회담을 진행하면서 서해 해상에서 충돌방지 및 공동어로수역 설정 문제를 중점적으로 협의했다. 북측은 서해상에서 충돌방지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해 해상 불가침경계선 문제를 우선 협의해야 하며 이 문제를 협의할 경우 공동어로 실현 문제와 군사적 대책 및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 문제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4차 회담은 3차 회담에서 제기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을 주장했고 북측은 서해 해상불가침경계선 문제를 장성급군사회담에서 다루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가) 북한 언론 반응

『로동신문』은 제3~4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을 각각 2회씩 총 4회 보도했다.

제3~7차 장성급군사회담까지 기본적인 보도패턴인 회담 개최 다음날 “북남 장령급군사회담이 열렸다”라고 보도하고 회담 종료 다음날 “북남 장령급군사회담이 끝났다”라고 보도했다. 제3차 회담과 관련한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의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사는 회담 개최 다음날 4면에 5단 기사⁶⁴⁾로 군사회담이 개최된 사실 및 북측 단장의 기조발언 전 군사회담분위기에 맞지 않

은 남측의 부당한 처사 항의내용 및 기초발언 소개내용을 게재했다. 북측의 우선양보요구 및 불가사항 요구형태의 반복 전술을 전형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두 번째 기사는 회담 종료 다음날 4면에 5단 기사⁶⁵⁾로 군사회담이 종료된 사실과 회담 시 남측과 공통점 및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언급했다. 이것은 북측이 장성급군사회담에 대한 중요성과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민주조선』에서는 『로동신문』과 동일하게 2회를 게재했으며 첫 번째 기사는 4면에 5단으로 두 번째 기사는 3면에 5단 기사 크기로 게재했다.

제4차 회담과 관련한 『로동신문』과 『민주조선』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사는 회담 개최 다음날 4면에 5단 기사⁶⁶⁾로 군사회담이 개최된 사실 및 북측 단장의 기초발언 및 토의를 좀 더 심도 있게 진행하자고 요구하면서 한미연합훈련 중지예 대한 사항으로 상투적이고 반복적인 내용을 게재했다.

두 번째 기사는 2차 회담 종료 다음날 4면에 5단 기사⁶⁷⁾로 군사회담이 종료된 사실과 “조선 서해 해상의 충돌 문제를 근원적으로 막기

64) “제3차 북남 장령급군사회담이 열렸다”는 기사로 4면에 게재되었다. 『로동신문』 2006년 3월 3일.

65) “제3차 북남 장령급군사회담이 끝났다”는 기사로 4면에 게재되었다. 위의 신문, 2006년 3월 4일.

66) “제4차 북남 장령급군사회담이 열렸다”는 기사로 4면에 게재되었다. 위의 신문, 2006년 5월 17일.

67) “제3차 북남 장령급군사회담이 끝났다”는 기사로 4면에 게재되었다. 위의 신문, 2006년 5월 19일.

위한 제안”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게재하면서 전형적인 위협전술을 구사했다.

『민주조선』에서는 『로동신문』과 동일하게 각각 2회를 게재했으며 첫 번째 기사는 4면에 5단, 3면에 5단 크기로 게재했다. 두 번째 기사는 3면에 5단, 4면에 3단 크기로 게재했다.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에서 3단, 4단, 5단 크기로 게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장성급군사회담에 대한 북측의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

나) 협상행태 평가 및 결정 요인 분석

(가) 협상행태

협상주도권 장악을 위해서 북측 기초발언 시 한미 합동군사연습과 관련해 “북남 관계발전에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미치게 될 것이다”⁶⁸⁾라는 강경한 발언을 했다. 북측은 서해 해상 불가침경계선 문제를 우선 협의해야 하며, 이 문제를 협의할 경우 타 의제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협상을 통한 의제를 조율해야 함에도 억지주장을 하는 것이었다.

합의사항 위반사항으로는 회담 비공개 원칙에 위배되는 회담 간에 기자회견을 기습적으로 제의해 해상경계선 재설정 문제를 남측 기사단에게 알리려고 했다. 또한 최초 합의했던⁶⁹⁾ 1성급 장성을 수석대표로 하는 회담대표도 제3차 회담부터는 2성급⁷⁰⁾으로 조정해 회담에

68) 남조선 당국이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미국의 도발적인 전쟁연습소동에 가담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한 적대외사의 표시이며 나아가서 6·15 공동선언을 무력화시키고…… 북남 관계발전에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미치게 될 것이다. 위의 신문, 2006년 3월 4일.

69) 2004년 5월 25일 남북은 각기 1성급 장성을 수석대표로 합의했다.

참석했다.

일방적 의제 요구면에서는 사전 협의해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는 서해경계선 설정을 유도하는 의제를 선정해 일방적으로 요구⁷¹⁾했다. 이는 북측이 NLL을 무력화하고 새로운 해상경계선 설정을 유도하는 데 회담의 목표를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화결렬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선전사항으로 『로동신문』에 보도⁷²⁾한 바와 같이 서해 해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북남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게재함으로써 차후 관련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나) 협상행태 결정 요인 분석

군사협상 협상관은 제1, 2차 장성급군사회담과 동일하게 반드시 협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특수협상관에 의거 군사협상을 진행했다.

군사협상 목표는 내적으로는 체제유지와 사회주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 외형적으로는 재분배협상을 추구했으며, 이것은 북측이 군사협상을 체제유지 및 대남적화에 이용하는 도구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협상목표 달성을 위해서 제3, 4차 회담부터는 수석대표

70) 제3차 회담부터 제7차 회담까지 김영철 인민무력부 중장(2성급)이 회담에 참석했다.

71)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해상불가침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는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을 해상불가침구역으로 한다”고 합의한 대로 NLL을 존중·준수하고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8개 군사합의사항들을 전면적으로 협의·이행한다는 두 가지 전제하에 해상불가침경계선 문제를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72) 민감한 서해 해상에서 충돌의 근원을 먼저 제거하는 문제이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북남 관계개선에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로동신문』 2006년 5월 19일.

계급을 상향해 군사회담 전문가인 김영철을 내세워 NLL 무력화에 전 역량을 집중⁷³⁾했다.

군사협상의 전략으로는 동일하게 응용전략인 혼합전략을 사용했다. 북측은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 첫 번째 『로동신문』 기사에서 기초 연설 간 “서해 해상 충돌을 방지하고 공동어로를 실현하는 문제는 반드시 민족의 공영공리를 도모하는 원칙에 기초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최초 강경전략자세를 보여주었다. 다음 단계로 체제유지를 위한 더 큰 실리를 얻고자 북측에 필요한 서해 해상의 NLL 무력화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해결전략을 혼합적으로 구사했다.

군사협상전술은 동일하게 체제유지와 대남적화와 관련해 문제해결 논쟁전술을 사용했다.

북측은 서해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 옳은 입장과 자세, 공정한 원칙, 합의해야 할 의제를 포괄적으로 제시해 회담의 본질을 흐렸으며 북측에 유리한 의제를 제시⁷⁴⁾했다. 또한 북측은 해주직항로 문제를 공동어로수역 설정 문제와 함께 논의할 것임을 시사해 의제 내용의 이중성을 드러냈다.

협상상황을 보면 2006년은 북측 내부적으로 지속적인 내부 결속력을 강조하면서 신년사⁷⁵⁾에서 언급했듯이 “원대한 포부와 신심에 넘쳐 더 높이 비약하자”고 강조했다.

남북관계는 2월 27~28일 제4차 이산가족 화상상봉 및 4월 24일 제18차 남북장관급 회담, 6월 19~30일까지 제14차 이산가족상봉행사 등 전반기에는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73) 문성목 면담(2012년 5월 23일).

74) 『로동신문』 2006년 3월 3일.

75) 위의 신문, 2006년 1월 1일.

국제관계면에서 미국은 부시정부의 ‘힘에 기반을 둔 외교’를 바탕으로 실용주의적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며 북·중 관계에서 김정일은 2006년 1월 10~18일까지 중국을 방문, 북·중 정상회담을 실시해 지속적인 북·중 우호관계를 과시했다.

③ 제5~7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2007.5.8~11/ 7.24~26/ 12.12~14)

제5차 회담에서 북측은 서해 해상 충돌방지, 공동어로 수역설정, 해주항 직항문제를 우선 논의하고,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문제는 5월 17일 예정된 열차시험운행의 군사보장 문제에 국한해 협의할 것을 주장했다. 2000년 이후 7년 만에 공동보도문과 열차시험운행의 군사보장 잠정합의서에 합의했다.

제6차 회담은 쌍방이 서해 해상에서 군사적 충돌방지와 공동어로 실현 및 경제협력 교류의 군사적 보장 문제에 관해 중점 협의했으나 북측의 완강한 자세로 합의 없이 회담을 종료했다.

제7차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을 위한 군사적 보장 문제와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설정 문제를 협의했으며, 쌍방은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 군사보장합의서를 타결했다.

가) 북한 언론 반응

『로동신문』은 제5~7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에서는 각각 2회씩 총 6회 보도했다.

기본적인 보도패턴은 제3~4차 장성급군사회담과 동일하게 회담 개최 다음날과 회담 종료 다음날에 보도했으며, 제5차 회담 관련한 『로동신문』과 『민주조선』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사는 회담 개최 다음날 4면에 5단 기사⁷⁶⁾로 군사회담이

개최된 사실 및 북측 단장의 기초발언 내용과 회담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게재했다. 북측의 대표적인 우선양보요구 및 불가사항 요구형태의 반복전술 등이 잘 나타난다. 또한 남측의 협상태도를 ‘체면주의’⁷⁷⁾라고 인식하는 부분이 흥미롭다.

두 번째 기사는 회담 종료 다음날 4면에 5단 기사⁷⁸⁾로 군사회담이 종료된 사실과 회담 공동보도문을 게재했다.

제6차 회담 관련한 보도내용으로 첫 번째 기사는 회담 개최 다음날 4면에 4단 기사⁷⁹⁾로 군사회담이 개최된 사실 및 북측 단장의 기초발언 내용과 남측에 항의한 내용⁸⁰⁾을 게재했다. 북측의 대표적인 우선양보요구 및 불가사항 요구형태의 반복전술 등이 잘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 기사는 5차 회담과 동일하게 회담 종료 다음날 4면에 5단 기사⁸¹⁾로 게재했다.

제7차 회담과 관련한 보도내용으로 첫 번째 기사는 회담이 개최된

76) “제5차 북남 장령급군사회담이 열렸다”는 기사로 4면에 게재되었다. 위의 신문, 2007년 5월 9일.

77)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위에 어울리게 응당히 갖추어야 할 고상한 인격과 좋은 도덕적 품성을 가르켜 체면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정도를 벗어나 정당한 것을 외면하면서 자기의 그릇된 주장이나 부당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기식과 허세, 기만과 회피, 고집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곧 허용하여서는 안 될 체면주의로 된다”고 주장했다. 위의 신문, 2007년 5월 9일

78) “제5차 북남 장령급군사회담이 끝났다”는 기사로 4면에 게재되었다. 위의 신문, 2006년 5월 12일.

79) “제6차 북남 장령급군사회담이 열렸다”는 기사로 4면에 게재되었다. 위의 신문, 2007년 7월 25일.

80) “지금까지 나타난 쌍방의 서로 다른 립장과 태도를 대조적으로 분석하면서 나라의 평화문제,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를 대하는 남측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궁했다”라고 항의했다. 위의 신문, 2007년 7월 25일.

81) “제6차 북남 장령급군사회담이 끝났다”는 기사로 4면에 게재되었다. 위의 신문, 2006년 7월 27일.

다음날 4면에 4단 기사⁸²⁾로 군사회담이 개최된 사실 및 북측 단장의 기초발언 내용과 북측의 회담에 대한 원칙입장을 게재했다. 군사회담마다 사용되는 회담 주도권 장악을 위한 북측의 반복주장 및 위협성 발언⁸³⁾ 역시 게재하고 있다.

두 번째 기사는 회담 종료 다음날 4면에 4단 기사⁸⁴⁾로 군사회담이 종료된 사실과 합의서 채택 내용과 북측의 군사협상의 전형적인 행태인 일방적인 억지주장과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내용을 게재하고 있다.

『민주조선』에서는 『로동신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각각 2회를 게재했으며 첫 번째 기사는 3면에 5단, 4면에 4단, 3면에 5단 크기로 게재했다.

두 번째 기사는 3면에 3단, 3면에 4단, 3면에 3단 크기로 게재했다.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에서 3단, 4단, 5단 크기로 게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장성급군사회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에게 선전할 사항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나) 협상행태 평가 및 결정 요인 분석

(가) 협상행태

협상주도권 장악을 위해서 매 회담 때마다 북측은 기초발언 시 강경한 발언을 실시했다. 또한 남쪽은 미사일 개발이나 발사훈련, 대북

82) “제7차 북남 장령급군사회담이 열렸다”는 기사로 4면에 게재되었다. 위의 신문, 2007년 12월 13일.

83) “앞으로의 북남 관계발전은 이번 회담에 기울인 쌍방군당국의 진지한 노력여하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라고 했다. 위의 신문, 2007년 12월 13일.

84) “제7차 북남 장령급군사회담이 끝났다”는 기사로 4면에 게재되었다. 위의 신문, 2007년 12월 15일.

심리전 사항 등 “군사적 대결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⁸⁵⁾라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합의사항 위반사항으로 NLL 무력화를 위한 침범사건이 증가⁸⁶⁾하고 있다.

일방적 의제 요구면에서는 회담의 목표였던 NLL를 무력화하기 위한 서해경계선 설정을 유도하는 의제를 선정해 반복 요구했다.

대화결렬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선전사항으로 『로동신문』에 보도한 바와 같이 회담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며 남측은 “외세와 함께 벌리는 모든 전쟁연습을 중지해야 할 것”⁸⁷⁾이라고 주장했다.

(나) 협상행태 결정 요인 분석

군사협상 협상관은 제1~4차 장성급군사회담과 동일하게 특수협상관에 의거 군사협상을 진행했다. 물론 제5차 회담에서 일반협상관의 자세가 일부 보였지만 심층분석 결과 교류협력 사업을 통한 경제적인 실리 등을 챙기기 위함이었다.

군사협상 목표는 전형적인 재분배협상을 추구했다. 특히나 북측의 군사회담전문가인 김영철을 내세워 NLL무력화에 전 역량을 집중하면서 경제적 실리를 챙기기 위한 경제교류·협력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 조치 마련에 인식을 같이하는 자세를 보였다.

군사협상의 전략으로는 응용전략인 혼합전략을 사용했다. 북측은

85) 위의 신문, 2007년 7월 25일.

86) 합참이 미래희망연대의 송영선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통계에 의하면, 서해에서 NLL 침범은 2008년 21회, 2009년 49회, 2010년 94회로 판명되었다.

87) 『로동신문』 2007년 7월 25일.

제1~7차 장성급군사회담까지 변치 않는 사항으로 『로동신문』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조연설 간 북측의 회담원칙과 남측에 책임 전가 사항 및 위협성 발언을 주장하는 최초 강경전략자세를 보여주었다. 다음 단계로 체제유지와 경제적 실리에 필요한 서해 해상의 NLL 무력화 차원의 문제와 공동어로 수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해결전략을 혼합적으로 구사했다.

군사협상전술은 체제유지와 대남적화 관련해 문제해결 논쟁전술을 사용했다.

북측은 서해 해상 충돌방지와 공동어로실현 및 경제협력 교류의 군사적 보장문제를 일관되게 제시하면서 북측에 유리한 의제를 주장했다.

협상상황을 보면 2007년 북측은 강성대국의 원년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신년사⁸⁸⁾에 언급했듯이 “승리의 신심 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고 강조했다

남북관계는 5월 9~14일까지 제15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및 10월 역사적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실시해 10·4 선언을 발표하는 등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국제관계면에서 미국은 10월 3일 합의에 의거 북한과 미국은 양자 관계를 개선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간다는 공약을 유지했으며 12월 3일에는 힐(Hill) 국무부 차관보가 10·3 합의 이행방안 협의차 방북을 실시하는 등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었다. 한중관계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방한⁸⁹⁾을 계기로 4월 24일에는 김장수 국방

88) 위의 신문, 2007년 1월 1일.

89) 4월 10일 한중수교 1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방한했으며 닝푸쿠이(寧賦魁) 주한 중국대사와 김하중(金夏中) 주중 한국대사는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양

부 장관과 차오강쥘(曹剛川) 중국 국방장관이 회담을 하고 연내에 핫라인을 설치하는 등 군사훈련 관련⁹⁰⁾에도 의견 접근을 이루었다.

3) 남북 군사실무회담

(1) 추진 배경

제1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된 남북철도·도로연결의 군사적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 추진 차원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를 위해 사전 유엔사와 북측은 2000년 11월 17일 제12차 판문점 장성급회담을 열어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 연합군과 북한군 간 합의를 채택했다. 이를 근거로 남북 쌍방은 실무회담을 개최하게 되었으며 제21차 군사실무회담부터는 국방장관회담 및 장성급군사회담 관련 의제로 논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연구 목적상 군사실무회담은 제3기⁹¹⁾로 구분해 분석하기로 했다.

(2) 제1~15차 군사실무회담(2000.11.28~2003.1.27)

먼저 제1기 군사실무회담에서는 회담의제 등 협상내용을 고려⁹²⁾해

국 관계가 수교 이후 ‘동반자 관계’로 가까워졌다고 했다.

90) 2007년 9월 상하이에서 해군 공동탐색, 구조훈련을 한다는 데 의견접근을 이루었다.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북한의 대외관계』(과주: 한울, 2011), 272쪽.

91) 대통령 재임기간을 고려해 제3기로 구분해 분석했다. 제1기는 김대중 대통령 재임기간으로 2003년 2월 24일까지(1~15차), 제2기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간으로 2008년 2월 24일까지(16~36차), 제3기는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 중 2010년 12월 31일까지(37~38차)로 한정해 분석하기로 했다.

92) 제1~5차 회담은 경의선 지역 군사보장합의서 타결, 제6~8차는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 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타결, 제9~15차는 지뢰제거작업 상호 검증, 공사현장 상호 방문 등 협의,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 군사보장 잠정합의

추진내용을 고찰해보았다.

제1차 회담에서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 내 남북관리구역 설정시기, 설정범위 등 공사에 관한 상호입장을 확인하고 토의를 진행했다. 이후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양측 지역(통일각, 평화의 집)을 오가면서 회담을 진행했다.

제5차 회담에서 쌍방은 지금까지의 쟁점을 타결하고 세부 사항에 합의함으로써 “비무장지대 내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타결했다.

제6차 회담에서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채택했으며, 제7차 회담에서는 남북 쌍방의 군사보장합의서 본문확인 및 초안교환, 제8차 회담은 “군사보장합의서”를 교환·발표시켰다.

제9~15차 회담에서는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 개최 관련 북측 입장, 쌍방합의문(안), 비무장지대 균형공사와 지뢰제거 작업,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안)”을 협의 및 채택·발표했다.

북측은 군사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NLL 침범, MDL 월선, 2002년 6월 29일 제2차 서해교전 등 정전협정의 무력화를 시도했다. 그럼에도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에 관한 운영의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① 북한 언론 반응

『로동신문』은 남북 군사실무회담 관련 보도를 총 19회 실시했으며

타결 사항 등이다.

<표 2> 제1기 군사실무회담 『로동신문』 및 『민주조선』 보도내용⁹³⁾

구분	『로동신문』 / 『민주조선』 보도내용			
	회담일자	보도면/크기		내용(『민주조선』 보도내용은 동일)
		『로동신문』	『민주조선』	
제1차	2000.11.28	2000.11.29. 4면/3단	2000.11.29. 3면/3단	제1차 북남 군사실무회담 진행, 서해 해상 도발 및 외세전쟁연습 주장
제2차	2000.12.5	2000.12.6. 4면/3단	2000.12.6. 3면/3단	제2차 북남 군사실무회담 진행, 비무장지대의 일정구역 문제 토의
제3차	2000.12.21	2000.12.22. 4면/3단	2000.12.22. 4면/2단	제3차 북남 군사실무회담 진행, 적대적 대결 관념 청산
제4차	2001.1.31	2001.2.1. 4면/3단	2001.2.1. 3면/3단	제4차 북남 군사실무회담 진행, 북남 공동선언 이행 보장
제5차	2001.2.8	2001.2.9. 4면/3단	2001.2.9. 4면/4단	제5차 북남 군사실무회담 진행, 북남 관리구역 설정과 북과 남을 련결하는 철도와 도로 작업의 군사적 보장 합의(주적개념 관련 서명·발효 지연)
제6차	2001.9.14	2001.9.16. 4면/3단	2001.9.17. 3면/3단	제6차 북남 군사실무회담 진행
제8차	2002.9.17	2002.9.18. 4면/4단	2002.9.18. 3면/4단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북남 관리구역설정과 북과 남을 련결하는 철도, 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채택, 제7차 북남 군사실무회담 진행
제15차	2003.1.27	2003.1.28. 4면/3단	2003.1.28. 3면/3단	북남 군사실무회담 단장접촉 진행 북남 관리구역 립시 도로 통행과 관련한 잠정합의서 채택

기본적인 보도방법은 회담결과가 명확한 회담만 보도 및 회담결렬관련 책임전가형 보도⁹³⁾를 게재했다.

제1기 군사실무회담에서는 총 8회를 회담 종료 후 다음날 <표 2>와 같이 보도했다.

93) 제4차 군사실무회담 보도자료에서 “남측이 우리를 주적으로 보던 20세기의 낡은 대결관념과 의식을 버리고 함께 손잡고 통일과 번영으로 나아가야 할 거레로 대하는 진정한 동족관념을 가지고 21세기 첫 회담부터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함으로써 민족의 념원과 기대에 보답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동신문』 2001년 2월 1일.

② 협상행태 평가 및 결정 요인 분석

가) 협상행태

협상주도권 장악을 위해서 최초단계에서부터 기초발언을 통해 남측에게 협상의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과 위협성 발언 및 책임전가형 내용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합의사항 위반사항으로는 주적과 관련해 합의서 서명·발효 지연 회담장소를 북측에서 갖자고 제의해 남측 내부를 혼드는 데 활용⁹⁵⁾하기도 했다.

일방적 의제 요구면에서 군사실무회담은 경의선 지역 군사보장합의서 타결 및 철도·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등을 위한 합의 의제임에도, 회담의제와 관련이 없는 주적 관련 사항, 합동군사연습 중지 등 일방적 의제에 대한 북측 입장을 주장했다.

대화결렬과 관련해 남측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사전 기초발언 시 회담 상대방에 대한 압력 차원의 내용을 주장했다.

나) 협상행태 결정 요인 분석

군사협상 협상관은 국방장관회담, 장성급군사회담과 동일하게 특수협상관에 의거 군사협상을 진행했다. 물론 실무협의 차원에서 개최된 회담이라 협상관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근본적인 회담관은 변치 않았다.⁹⁶⁾

94) 보도자료는 『로동신문』을 분석 및 고찰한 내용이며, 남측회담 차수와 북측회담 차수 차이로 『로동신문』 보도제목이 상이하다.

95) “우리 내부에서 주적문제가 정치화되어 상당한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문성묵, “남북 군사회담 경험을 기초로 살펴본 북한의 협상전략,” 56쪽.

96) 문성묵 면담(2012년 5월 23일).

군사협상 목표는 외형적으로는 재분배협상을 추구하면서 북측의 협상목표인 체제유지 및 대남적화를 추구하면서 경제적 실리를 챙겼다.

군사협상의 전략으로는 동일하게 응용전략인 혼합전략을 사용했다. 북측은 최초 강경전략에서 체제유지와 대남적화에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해결전략을 혼합적으로 구사했다.

군사협상전술은 체제유지와 대남적화 관련해 논쟁전술의 한 분야인 문제해결을 위한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1기 군사실무회담 주요 북측 협상의제는 ① 주적 개념 철회, ② 합동군사연습, 한미연합훈련 금지, 대규모 군사연습 중지 등 북측에 유리한 의제로 선정했다. 북측은 외적으로는 군사적인 의제를 협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체제유지 및 NLL 무력화, 남남갈등의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다.

협상상황을 보면 2004년은 북측 내부적으로 결속력을 강조하면서 신년사⁹⁷⁾에 언급했듯이 “당의 령도 밑에 강성대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 공세를 벌려 올해를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고 강조했다

남북관계는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통해 한걸음 진전하고 있으며 김대중 정부는 북한을 포용하는 ‘햇볕정책’⁹⁸⁾을 추진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 남북은 부시 행정부의 견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군사

97) “승리의 심심 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발표, 『로동신문』 2003년 1월 1일.

98) ‘햇볕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공식용어가 아니다. 북한은 김대중 정부 초기 ‘햇볕정책’이란 용어에 거부반응을 보였다. 북측의 거부감을 고려해 대북포용정책으로 명명했다가 나중에 ‘대북화해협력정책’으로 공식명칭을 변경했다. 이원섭, 『햇볕정책을 위한 변론』(서울: 필맥, 2003), 33~34쪽.

적 회해 노력을 계속해나갔다.

국제관계면에서는 부시행정부 출범이후 북·미관계는 큰 틀에서 볼 때 접근에서 대결의 방향으로 변화했다. 2002년 연두교서 발표를 통해 북한을 악의 축 국가 중 하나로 규정하고 핵 선제공격 대상 7개국 중 하나로 지정했다.⁹⁹⁾ 2월 서울에서의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면 전쟁이 아닌 대화를 통해 위협을 제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다시 대화를 모색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2000년 초반의 북·중 관계 중 경제관계에서 비대칭적인 상호의존 관계가 심화되었으며 북·중 군사교류는 중국 국방부장이 방북해 김정일과 회담하는 등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¹⁰⁰⁾하고 있었다.

(3) 제16~36차 군사실무회담(2003.9.17~2008.1.25)

제2기 군사실무회담에서는 회담의제 등 협상특성을 고려¹⁰¹⁾해 추진내용을 고찰 및 분석해보았다.

제16~20차 회담에서는 남북 상호 현장 확인방문 합의,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의 보충합의서를 채택·발효, 남북관리구역 경비 초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99) 함택영·남궁곤, 『한국 외교정책: 역사와 쟁점』(서울: 사회평론, 2010), 5~6쪽.

100) 세종연구소, 『북한의 대외관계』, 270~273쪽.

101) 제16~20차 회담은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 군사보장 잠정합의서의 보충 합의서 타결,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경비초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합의서 타결, 제21~25차는 서해상에서의 우발충돌방지 조치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합의서 채택, 선전수단 제거 관련 이견사항 협의, 제26~36차는 철도·도로통행의 군사보장 합의서 체결문제, 제5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공동보도문 합의이행문제 협의, 제2차 국방장관회담 합의문안 조율,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 수송의 군사보장 합의서 체결 및 관련 문제 논의사항 등이다.

합의서(안)을 협의 및 교환 후 발효했다.

제21~25차 회담에서는 서해상에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합의서 채택·발효, 선전수단 제거 대상 관련 이견사항 및 착수 협의를 실시했다.

제26~36차 회담에서는 장성급군사회담 개최 합의 문제를 협의, 열차시험운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채택, 제2차 국방장관 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적 문제협의와 합의문안 조율,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 수송의 군사보장 합의서 등을 논의 및 합의했다.

① 북한 언론 반응

제2기 군사실무회담은 총 10회에 걸쳐 회담 종료 후 다음날¹⁰²⁾ <표 3>과 같이 보도했다.

세부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6·15 선언의 합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북측 단장 주장내용을 게재했다. 특히 심리전 선전 수단 “제거과제를 기본적으로 끝낸 것은 반세기 이상의 분렬력사에서 처음 있는 역사적 사변이다”라고 보도하면서 심리전 수단이 체제유지와 얼마나 깊은 관련이 있는지를 대변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남측에 회담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의제와 관련 없는 내용반복 및 위협성 발언내용을 지속적으로 게재했다.

102) 예외적으로 제30차 군사실무회담(2007.7.10) 보도는 회담 종료 2일 후(2007.7.12)에 보도했다.

103) 제25차 군사실무회담(2005.8.12) 『민주조선』 보도는 3면과 4면에 걸쳐 보도되었다.

<표 3> 제2기 군사실무회담 『로동신문』 및 『민주조선』 보도내용¹⁰⁴⁾

구분	『로동신문』 / 『민주조선』 보도내용			
	회담일자	보도면/크기		내용(『민주조선』 보도내용은 동일)
		『로동신문』	『민주조선』	
제17차	2003.9.17	2003.9.18 4면/3단	2003.9.18 4면/3단	제8차 북남 군사실무회담 진행
제19차	2003.12.23	2003.12.24 4면/3단	2003.12.24 4면/3단	제9차 북남 군사실무회담 진행
제21차	2004.6.12	2004.6.13 4면/5단	2004.6.13 4면/3단	북남 군사실무회담 진행
제22차	2004.6.30	2004.7.1 4면/5단	2004.7.1 3면/3단	군사분계선 전 지역에서 선전활동 전면 중지, 1단계 선전수단 제거 완료 북남 군사실무회담 진행
제24차	2005.7.20	2005.7.21 4면/4단	2005.7.21 3면/3단	북남 군사실무회담 진행
제25차	2005.8.12	2005.8.13 4면/5단	'05.8.13 3, 4면/5단	북남 군사실무회담 진행, 선전수단 제거내용 설명, 남측 을지포커스 렌즈 05 합동군사연습은 핵전쟁연습이라고 보도
제30차	2007.7.10	2007.7.12 4면/5단	2007.7.12 3면/5단	북남 군사실무회담 진행, 남조선당국이 빠리살포기구와 여러 가지 방송 수단을 동원해 심리전, 공식사죄 요구 및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적인 조치
제31차	2007.7.16	2007.7.17 4면/5단	2007.7.17 5면/3단	북남 군사실무회담 다시 진행, 서해 해상에 공정한 해상군사분계선을 설정, 해주직항과 제주해협에 대한 완전한 통과
제32차	2007.11.12	2007.11.13 4면/2단	2007.11.13 4면/3단	북남 인민무력부장급회담 개최를 위한 군사실무회담 진행
제35차	2007.12.5	2007.12.6 4면/3단	2007.12.6 4면/3단	북남 군사실무회담 진행,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수송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채택

② 협상행태 평가 및 결정 요인 분석

가) 협상행태

협상주도권 장악을 위해서 제25차 회담 시 북측은 기초발언 시 남

측의 선전활동 중지¹⁰⁴)와 핵전쟁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며 계속 반복된다면 남북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30차 회담에서 남측의 민간인 뼈라 살포와 관련해 “용납 못할 범죄행위”¹⁰⁵)라고 주장하면서 군사회담을 원한다면 북측 요구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러한 기초발언들은 군사협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주장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합의사항 위반사항으로는 제23차 군사회담 후 ‘김일성 조문 불허’ 등을 이유로 대남 비방 증가 및 제28차 회담 종료 후 2006년 10월에는 핵실험 계획 발표 및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전면적인 합의를 위반했다.

민간인들이 임의로 군사분계선 지역 밖에서 전단 살포와 관련해 민족반역자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억지주장을 했다. 또한 제26차 회담 시에는 저질 피치를 지원해 항공기 이착륙이 어렵다고 억지주장을 했다.

일방적 의제 요구면에서는 장성급군사회담과 동일하게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선전활동 중지 및 수단제거 문제와 서해 해상 충돌방지에 관련된 의제를 우선적으로 먼저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대화결렬과 관련해 남측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압력차원의 내용을 언급했다.

104)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좋게 발전하고 있는 북남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로동신문』 2005년 8월 13일.

105) “남측이 새로운 형태의 심리전 책동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쌍방군사적 합의를 훼손시키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이다.” 위의 신문, 2007년 7월 12일.

나) 협상행태 결정 요인 분석

군사협상 협상관은 국방장관회담 및 장성급군사회담과 동일하게 특수협상관에 의거 군사협상을 진행했다. 합의서 채택 관련해서는 일반협상관을 일부 보여주고 있지만 최초 기초발언 및 남측을 향한 위협성 발언 등을 판단해보면 지속적으로 특수협상관을 유지하고 있다.

군사협상 목표는 외형적으로는 재분배협상을 추구했으며, 이것은 북측이 군사협상을 체제유지 및 대남적화라는 근본적인 요인은 변화가 없었다.

군사협상의 전략으로는 동일하게 응용전략인 혼합전략을 사용했다. 최초 강경전략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해결전략을 혼합적으로 구사했다.

군사협상전술은 체제유지와 대남적화와 관련해 논쟁전술의 한 분야인 문제해결을 위한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측의 협상의제는 ① 전단 살포 중지, 선전수단 제거 관련 사항, ② 서해 해상에서 우발 충돌방지 문제 등 북측에 유리한 의제로 선정했다.

협상상황을 보면 2003~2007년 북측은 신년사¹⁰⁶⁾에서 선군정치를 강조하면서 내부적인 결속력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특히 2006년 7월 대포동 2호 시험발사, 2006년 10월 제1차 핵실험 등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2003년 참여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상호신뢰 우선과 호혜주의, 남북당사자 원칙에 입각한 국제협력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106) “위대한 선군기치 따라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높이 떨치자” 발표, 『로동신문』 2003년 1월 1일;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발표, 위의 신문, 2005년 1월 1일.

정책을 추진의 원칙으로 내세워 남북관계를 추진했다.¹⁰⁷⁾ 2006년도에 북한의 핵실험은 대북정책 추진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국제관계면에서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화 없이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요구만을 지속해왔던 북·미관계에서 2003년 4월 하순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3자회담이 베이징에서 개최됨으로써 일단 위기는 해소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보다 강경한 대북정책을 생각하고 있었다.”¹⁰⁸⁾

중국의 대외정책이 표면상으로는 도광양회에서 화평굴기¹⁰⁹⁾로 변화하고 있었으며 북·중 군사관계의 성격변화에 관한 논의가 2006년 북한의 미사일, 핵실험으로 인해 더욱 고조¹¹⁰⁾되었다.

(4) 제37~38차 군사실무회담(2008.10.2~2010.9.30)

제3기 군사실무회담에서는 남북대화 중단 선언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제37차 군사회담과 38차 군사회담을 고려¹¹¹⁾해 추진내용을 고찰했다.

제37차 회담에서 최근 남북관계에서 현안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

107)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 2003년 2월 25일.

108) 백학순, 『부시정부 출범 이후의 북·미관계 변화와 북한핵 문제』(성남: 세종연구소, 2003), 31쪽.

109) ‘도광양회’(道光養晦)는 1980년대 중국의 대외정책을 표현한 용어로 “빛을 숨기고 어둠 속에서 재능과 능력을 드러내지 않은 채 때를 기다리며 힘을 기른다”는 의미이며, ‘화평굴기’(和平崛起)는 2003년 말부터 중국 총리와 국가주석 등 제4세대 지도부가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로서 “중국은 패권주의를 지향하지 않으며 변화된 세계질서에 맞게 평화롭게 우뚝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이다.

110) 세종연구소, 『북한의 대외관계』, 270~273쪽.

111) 제37~38차 회담은 남북당국 간 합의·이행 관련 문제 협의와 천안함 문제 시인·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등 책임 있는 조치 촉구 등이다.

안¹¹²⁾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으나 북측은 금강산 사건은 정당한 군사적 조치였음을 강변하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 언급을 회피했다.

제38차 회담에서 남측은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결과, 북한 측의 소행임이 명백히 밝혀졌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인 및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① 북한 언론 반응

제3기 군사실무회담에서는 회담 종료 후 다음날 <표 4>와 같이 총 1회 보도했다.

세부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북측은 남측이 쌍방합의에 배치되게 심리전 전단 살포행위에 매달리고 있다고 추궁하면서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위배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앞으로도 심리전 전단 살포행위를 지속하면 남북협력사업과 개성관광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군사분계선을 활용한 남측 인원들의 통행 제한 및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인원이 체류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위협했다. 매번 회담내용 보도 시 남측에 회담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모든 것은 남측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했다.

112) 북측의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 상호 비방·증상 즉각적인 중단 촉구, 남북대화 전면재개 강조, 금강산 관광객 사망사건 유감표명 및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신변안전 보장대책, 개성관광객과 개성공단사업자들의 출입 및 통행 애로사항 해결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표 4> 제3기 군사실무회담 『로동신문』 및 『민주조선』 보도내용

구분	『로동신문』 / 『민주조선』 보도내용			
	회담일자	보도면/크기		내용(『민주조선』 보도내용은 동일)
		『로동신문』	『민주조선』	
제37차	2008.10.2	2008.10.3 4면/5단	2008.10.3 5면/5단	남조선괴뢰군부의 북남 합의위반행위를 강하게 추궁, 북남 군사실무회담 진행

② 협상행태 평가 및 결정 요인 분석

가) 협상행태

협상주도권 장악을 위해서 북측은 기초발언 시 심리전 활동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모든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개성관광에 엄중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¹¹³⁾했다. 이러한 협상방법은 초기단계부터 정상적인 협상보다는 주도권을 장악한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협상을 전개하기 위해서이다.

합의사항 위반사항으로는 군사회담과 관련이 없는 민간단체 전단 살포와 관련해 12, 1일 조치를 시행¹¹⁴⁾했다. 이러한 일방적 결과를 근거로 군사분계선 통행 제한, 금강산 체류인원 제한 통보 등 억지주장을 하면서 통행 제한 조치를 취했다.

일방적 의제 요구면에서는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와 관련된 사항의

113) “반공화국의 빠라살포행위는 적대감 고취의 직접적 표현이다. 빠라살포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우리 군인들의 분노가 언제 새로운 군사적 충돌의 도화선에 불씨로 번져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앞으로도 빠라살포에 계속 매여달린다면 첫째로 지금 진행 중인 개성 공업지구에서의 모든 북남 협력사업과 개성관광에 엄중한 후과가 초래될 것.” 『로동신문』 2008년 10월 3일.

114) 2008년 12월 1일 북한 측 조치 시행사항으로 군사분계선 통행 제한, 개성관광 중지, 남북 간 열차운행 중단, 남북육로 통행 제한 등의 조치를 말한다.

제를 우선적으로 먼저 협상할 것을 요구했다. 대화결렬과 관련해 전단 살포 행위가 계속될 경우 남측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압력 차원의 내용을 강하게 언급¹¹⁵⁾했다.

나) 협상행태 결정 요인 분석

협상관은 평소보다 강한 특수협상관에 의거 군사협상을 진행했다.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와 관련해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협상의 일반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북측의 입장을 전달하고 향후 군사회담에 대한 위협적인 주장만 실시했다.

군사협상 목표는 전형적으로는 재분배협상을 추구했으며, 군사협상의 전략으로는 기본 전략인 강경 전략을 사용해 최초부터 대결과 제압적 자세로 인해 합의도출이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북측은 『로동신문』 기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전단 살포와 관련해 최초부터 회담 종결 시까지 경쟁전략을 구사했다.

군사협상전술은 체제유지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남측의 태도를 바꾸려는 흥정전술의 한 분야인 공격적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

북측의 협상의제는 남측 민간단체에 의한 전단 살포 사례 관련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약속 요구로 군사회담과는 관련이 없는 북측에 유리한 의제로 선정했다. 전형적인 의제의 이중성이다.

협상상황을 보면 북측은 2008년 신년사¹¹⁶⁾에서 언급했듯이 “공화국 창건 60돌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 새겨질 역사적 전환의

115) “이것은 괴뢰군부를 비롯한 남조선괴뢰당국이 북남 관계개선과 민족적 화해협력력이 아니라 대결과 분렬의 길로 내닫고 있다는 산 증거로 된다.” 『로동신문』 2008년 10월 3일.

116) 위의 신문, 2008년 1월 1일.

해로 빛내이자”고 강조했다

남북관계는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새로운 한반도 평화구조를 창출하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진입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를 확충해나간다는 비전을 가지고 출범했다. 그러나 북측 초병의 총격에 의한 금강산 관광객 사망 및 북측 핵 프로그램 재가동 관련 등으로 어려운 관계에 처해 있었다.

국제관계면에서 미국은 2008년 부시정부 말기 북한에 대한 테러리즘 지원국 명단 제외와 ‘적성국 교육법’ 적용 해제를 지시해 북·미 관계에 다시 청신호가 울렸다.¹¹⁷⁾ 중국이 북한에 구사해온 정책기조는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를 지향하며, 선린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협력을 확대하는” 데 있다. 연초의 후진타오 주석이 왕지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북한에 보내 친서를 전달했으며, 6월 17일에 중국 국가부주석 시진핑(習近平)이 방북했다. 이는 2005년 후진타오 중국 주석 방북 이후 최고위층의 방북¹¹⁸⁾이다.

4) 남북 군사회담의 협상행태 및 결정 요인 분석

앞에서 고찰 및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김정일 시대의 군사협상

117) 미국 국무부는 2008년 10월 11일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 해제를 발표하고 협의의 진행상황과 핵 검증에 관한 북·미 핵 검증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11월 4~11일까지 북한 외무성 리근 미국국장이 북핵 검증 문제를 논의차 뉴욕을 방문했다. 통일연구원, 『남북관계연표 1948~2011년』(통일연구원, 2011), 465쪽.

118) 통일연구원,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8~2009년』(통일연구원, 2009), 66~68쪽.

< 표 5 > 2000~2010년 군사협상의 협상형태 및 결정 요인 비교 분석

구분	협상형태 결정 요인							협상형태			
	1차 요인			2차 요인				주도권	억지	위반	일방적 의제
	협상관	목표	전략	전술	의제	상황					
국방장관군사회담(2차) -1차: 2000.9.24~26 -2차: 2007.11.27~29	제1차	특수협상	재분배	혼합	문제해결	√	√	○	○	○	○
	제2차	특수협상	재분배	혼합	공격/ 문제해결	√	√	○	○	○	○
장성급군사회담(7차) (2004.5.26~ 2007.12.14) 보도자료	제1차	특수협상	재분배	혼합	공격/ 문제해결	√	√	○	○	○	○
	제2차	특수협상	재분배	혼합	공격/ 문제해결	√	√	○	○	○	○
	제3차	특수협상	재분배	혼합	공격/ 문제해결	√	√	○	○	○	○
	제4차	특수협상	재분배	혼합	공격/ 문제해결	√	√	○	○	○	○
	제5차	특수협상	재분배	혼합	공격/ 문제해결	√	√	○	○	○	○
	제6차	특수협상	재분배	혼합	공격/ 문제해결	√	√	○	○	○	○
	제7차	특수협상	재분배	혼합	공격/ 문제해결	√	√	○	○	○	○
군사실무회담(38차) (2000.11.29~ 2010.9.30) 보도자료	제1차	특수협상	재분배	혼합	문제해결	√	√	○	○	○	○
	제3차	특수협상	재분배	혼합	공격	√	√	○	○	○	○
	제4차	특수협상	재분배	혼합	공격/ 문제해결	√	√	○	○	○	○
	제7차	특수협상	재분배	혼합	문제해결	√	√	○	○	○	○
	제8차	특수협상	재분배	혼합	문제해결	√	√	○	○	○	○
	제21차	특수협상	재분배	혼합	문제해결	√	√	○	○	○	○
	제22차	특수협상	재분배	혼합	문제해결	√	√	○	○	○	○
	제24차	특수협상	재분배	혼합	공격/ 문제해결	√	√	○	○	○	○
	제25차	특수협상	재분배	혼합	공격	√	√	○	○	○	○
	제30차	특수협상	재분배	혼합	공격	√	√	○	○	○	○
제37차	특수협상	재분배	경쟁	공격	√	√	○	○	○	○	

주 1) 군사실무회담은 제1기~3기로 구분해 「로동신문」에 보도된 주요 회담을 대상으로 선정.
 2) 표 내용 중 √ 표시는 협상의제 및 협상상황이 협상형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의미로 분석했으며 ○ 표시는 결정 요인에 의해 협상형태의 변화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시.

태 및 결정 요인을 종합한 결과 분석틀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1차 결정 요인인 협상관, 협상목표, 협상전략은 군사협상행태에 기본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 변하지 않고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회담별 협상행태 결정 요인 분석에서 병렬적으로 제시한 북한의 협상전략, 전술, 의제,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해 앞에서 제시한 군사협상행태를 결정하게 되었다. 특히 김정일 시대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군사협상의 목표이며 당면과제였던 체제유지 및 경제난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군사협상행태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2차 요인인 협상전술, 협상의제, 협상상황은 군사협상이 개최 될 때마다 1차 요인에 의거 동일하게 변화하고 있음은 <표 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국방장관회담, 장성급군사회담이 각각 별도로 협상이 진행되었지만 북측의 주요한 군사협상행태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측은 전형적인 군사협상의 행태인 주도권 장악, 억지주장, 합의 사항 위반, 일방적 의제 요구 등으로 체제유지와 경제난 해결을 위한 돌파구로 군사회담을 활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¹¹⁹⁾

김정일 시대의 군사협상행태 및 결정 요인을 종합한 결과는 <표 5>로 제시했다.

119) 위와 같은 북한의 협상행태에 대해서 “북한의 대외협상을 위한 개별 행동은 다른 나라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것이다. 주도권 장악 전술, 전제조건 제시, 원칙 제시, 높은 요구, 지연전술, 책임전가, 선전 및 홍보, 중재자 활용, 비공식 접촉 등은 국제사회의 협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북한도 다른 나라와 비슷한 협상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김용호, “북한의 대외협상 행태 분석,” 306쪽.

4. 결론

지금까지 2000년대 이후 한국의 군사대표단으로 구성된 인원과 북한 군부대표들과 군사문제를 논의한 국방장관회담, 장성급군사회담,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북한의 김정일 시대 군사협상행태 및 결정 요인에 대해서 고찰 및 분석해보았다. 특히 북한의 대표적인 당 기관지인 『로동신문』과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의 보도내용을 포함해 결정 요인 및 협상행태를 분석하는 데 활용한 결과 협상행태 특성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 명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북한의 군사협상행태는 협상주도권 장악, 억지주장, 합의사항 위반, 일방적 의제요구, 대화결렬 책임전가 등으로 거의 모든 군사협상에서 표출되어 나타난다.

둘째, 북한의 군사협상행태는 1·2차 결정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주요인으로 1차 결정 요인인 협상관, 협상목표, 협상전략은 모든 군사협상에서 변치 않고 있다. 북한은 아직까지 공산국가의 전통적인 협상관에 의거 군사협상은 다른 수단을 통한 투쟁에 불과한 것으로 협상에서 일방적 승리를 추구하기 위한 특수협상관을 고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일부 협상에서는 남측과 서방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인식에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협상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변치 않고 있다. 협상목표면에서 군사협상을 탈냉전 이후에는 우선적으로 체제유지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남전략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협상전략면에서는 협상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 단계별로 경쟁전략 및 체제생존과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기 위한 문제해결전략을 사용하는 혼합전략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셋째, 2차 결정 요인 협상전술, 협상의제, 협상상황은 1차 결정 요인에 의거 군사협상별로 동일하게 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냉전이 종식됨에 따라 북한의 협상행태가 변했다고 하지만 군사협상행태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10년간의 군사협상을 분석해본 결과 북한의 군사협상행태는 전술 차원에서는 일부 변화하고 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으나 체제유지를 위해 군사협상을 활용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이제까지 협상행태 결정 요인 분석에서 병렬적으로 제시했던 북한의 협상전략, 전술, 의제,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해 앞에서 제시한 군사협상행태를 결정했다. 즉 김정일 시대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군사협상의 목표이며 당면과제였던 체제유지 및 경제난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군사협상행태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향후 이와 같은 군사협상행태를 바탕으로 군사협상의 중요성을 인식해 회담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가 다음과 같이 요구된다.

첫째, 상시 군사회담 대응체제를 구축해 유지해야 한다. 현재의 정책관실 체제에 추가해 군사협상 전담기구를 신설해야 하며 군사회담 수준에 따른 군사협상 의제별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협상전문가 육성 및 협상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전문가 육성 시에는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북한체제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학문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 군부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군사협상행태의 1차 결정 요인 위주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남북관계가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변화를 준비하면서 확고한 원칙 아래 한걸음씩 전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연구의 한계는 자료수집의 제한에 있었다. 군사협상 결정 요인별 분석을 통해 협상행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쳐 협상행태로 표출되는지를 추적하는 비교분석 작업과 행태분석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들이 더욱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접수: 6월 29일 / 수정: 7월 30일 / 채택: 8월 1일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제1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김정일, 『김정일 선집』, 제1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김철우, 『김정일 장군의 선군정치』(평양: 평양출판사, 2000).
『광명백과사전』 3(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84).
『대중정치용어사전』(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백과전서』 5(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84).
『경제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조선말대사전』 (1), (2)(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조선문화어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조선중앙년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년).
『정치용어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로동신문』, 『민주조선』(국방장관회담, 장성급군사회담, 군사실무회담 2000~2010년 보도자료)

2. 국내 자료

1) 단행본

- 고유환,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 변화』(서울: 선인, 2006).
고재홍, 『김정일 체제의 북한군 연구』(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1).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2009 남북한군사회담 자료집』(서울: 국방부, 2009).
곽태환, 『북한의 협상전략과 남북한 관계』(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7).
김국신, 『부시행정부의 대북 핵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통일연구원, 2005).
김동명, 『독일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선택』(과주: 한울, 2010).
김우승, 『21세기 북한의 이해』(성남: 북코리아, 2011).
김지형, 『데탕트와 남북관계』(서울: 선인, 2008).
김종걸, 『협상은 문화다』(서울: 고려원북스, 2011).

- 김형기, 『남북관계변천사』(연세대학교출판부, 2010).
- 김해원, 『북한의 남북정치 협상연구』(서울: 선인, 2011).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북한연구의 성찰』(과주: 한울, 2005).
- 노중선,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50년』(사계절, 1996).
- 박순성, 『북한 경제와 한반도 통일』(풀빛, 2003).
- _____, 『북한 연구의 성찰』(과주: 한울, 2005).
- 백학순, 『부시정부 출범 이후의 북·미관계 변화와 북한핵 문제』(성남: 세종연
구소, 2003).
- 송중환, 『북한 협상행태의 이해』(서울: 오름, 2002).
- 서동만, 『북조선 연구』(과주: 창비, 2010).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남북한 관계와 국제정치 이론』(논형, 2012).
-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북한의 대외관계』(과주: 한울, 2011).
-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현문, 2011).
- 스코트스나이더, 『벼랑 끝 협상』(과주: 청년정신, 2003).
- Earl R. Babbie, 『사회조사방법론』(세계이저리닝코리아, 2012).
- 양성철·이용필, 『북한체제변화와 협상전략』(서울: 박영사, 1995).
- 이대근,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와 군부의
정치적 역할』(과주: 한울, 2003).
- 이달곤, 『협상론』(과주: 법문사, 2005).
- 이승철, 『21세기 동북아 국제관계와 한국』(과주: 나남, 2004).
- 이용준, 『게임의 종말』(과주: 한울, 2010).
- 이원섭, 『햇볕정책을 위한 변론』(서울: 필맥, 2003).
-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서울: 역사비평사, 1995).
-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갈등과 화해의 60년 남북관계사』(서울: 이화
여자대학교출판부, 2009).
- 전현준,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 방향』(통일
연구원, 2006).
- 정규섭, 『북한외교의 어제와 오늘』(일신사, 1999).
- 정성장, 『현대북한의 정치 역사-이념·권력체계』(서울: 한울, 2011).
- 정영철, 『북한의 개혁·개방: 이중전략과 실리사회주의』(서울: 선인, 2004).
- 장명봉, 『2011 최신 북한법령집』(북한법연구회, 2011).
- 장명순, 『북한군사연구』(팔복원, 1999).

- C. 터너 조이, 『공산주의자는 어떻게 협상하는가?』(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3).
- 척다운스, 『북한의 협상전략』(과주: 한울, 1999).
- 통일노력60년 발간위원회, 『하늘길 땅길 바닷길 열어 통일로』(서울: 다해, 2005).
- 통일연구원, 『남북관계연표 1948~2011년』(통일연구원, 2011).
- _____,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7~2008년』(통일연구원, 2008).
- _____,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8~2009년』(통일연구원, 2009).
- 프레드 C. 이클레, 『협상의 전략』, 이영일·이형래 공역(서울: 한얼문고, 1972).
- 한용섭,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서울: 박영사, 2005).
- 함택영·남궁곤, 『한국 외교정책: 역사와 쟁점』(서울: 사회평론, 2010).
- 허문영, 『북한 외교의 특징과 변화 가능성』(통일연구원, 2001).
- _____,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통일연구원, 2005).

2) 논문

- 고유환, “김정일체제의 위기와 우리식 사회주의 진로,” 『안보연구』 제24호(동국대학교, 1994).
- _____,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김정일 정권의 진로,” 『국제정치학회보』 제30집 제2호(1996).
- _____, “벼랑끝 협상전술과 북한의 저의,” 『월간 북한』, 제294호(1996).
- _____, “북한 변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의 가능성과 한계,” 『한반도군비통제』 제32집(2002).
- 금기연, “북한의 군사협상행태와 결정 요인: 유엔사-북한군 간 장성급회담 사례연구”(경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김계동, “차기 행정부의 통일 및 북한정책: 주요 과제와 전망,” 『한국정치학회 춘계 학술회의』(2003).
- 김강녕, “남북한 군사회담 개선방안,” 『군사논단』 제40호(2004).
- 김도태·차재운, “북한의 협상전술 특성 연구”(민족통일연구원, 1995).
- _____, “남북한 협상행태 비교연구”(민족통일연구원, 1994).
- _____, “북한의 국가이익과 협상태도 변화,” 『협상연구』, 제6권(2001).
- 김의곤, “교착을 위한 협상: 남북한 협상의 특징과 21세기 남북한 협상 연구 방향,” 『한국동북아논총』 제12집(한국동북아학회, 1999).

- 김용호, “북한의 대외협상 행태 분석,” 『국제정치논총』, 제40집 4호(2000).
- 김용현, “로동신문 분석을 통한 북한정치 변화 연구: 1945~1950,” 『북한연구학회보』, 제7권 제1호(2003).
- 김인수, “김정일 집권기 북한군 장령 진급에 관한 연구” 『국방정책연구』 제26권 제4호(2010).
- 김재홍, “북한의 남북 군사회담 의도 분석과 향후 전망” 『동북아안보정책분석』(국방연구원, 2010).
- 김진환, “북한의 체제위기와 대응전략: 개혁과 선군의 병행”(동국대학교 사회학 박사학위논문, 2008).
- 문광건, “북한식 협상행태의 변화 전망과 대북협상 원칙,” 『국방논집』, 제26호(한국국방연구원, 1994).
- 문성묵, “북한의 대남군사협상 전략·전술,” 『국방』, 260호(1995).
- _____,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 군사회담 평가,” 『군사논단』, 제27호(2001).
- _____, “남북한 군사적 신뢰 구축 현황과 향후 과제: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을 중심으로,” 『한반도 군비통제』(2005).
- _____, “남북 군사회담 경험을 기초로 살펴본 북한의 협상전략,” 『한반도 군비통제』, 제47집(2010).
- _____,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대한정치학회보』 제7집 1호(2011).
- _____, “남북 군사회담 대표의 관점에서 본 북한군, 북한에 군부(권력),” 『한국논단 7월호』(2012).
- 문순보, “남북 군사실무회담의 분석과 향후 남북관계 전망,” 『정세와 정책』, 3월호(성남: 세종연구소, 2011).
- 서주석, “2007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경제』(현대경제연구원, 2007).
- 송대성, “남북한 장성급회담과 군사적 신뢰 구축 전망,” 『한국군사』, 제19호(2004).
- 송종환, “북한 협상행태 연구의 문화적 접근,” 『협상연구』, 제8권(2002).
- 양무진, “북한의 대남협상전략유형”(경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_____, “북한의 대남협상행태: 지속과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19권(2003).
- 양성철, “협상일반이론과 대북협상전략 연구,” 『전략논총』 제5호(한국전략문

- 제연구소, 1995).
- 양일국, “북한 대남협상전략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오삼교, “북한의 협상전략과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국제정치연구』, 제4집(2001).
- 이동복,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협상전략: 과거 대북회담을 중심으로,” 『군사』 제31호(군사편찬연구소, 1995).
- 이미숙, “남북한 군사협상 과정의 발전단계에 관한 연구,” 『군사』, 제70호(2009).
- _____, “남북한 군사협상 의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_____, “남북한 군사협상의 역사적 조망과 향후 전망,” 『한반도 군비통제』, 제47집(2010).
- _____, “북한의 남북한 군사협상 결정 요인 고찰,” 『국방연구』, 제53권 제1호(2010).
- _____, “군사협상과 군사도발 병행 행태를 통해 본 북한의 대남전략,” 『통일정책연구』, 제20권(2011).
- 이영호, “대북 군사 협상 대비 방향,” 『한반도군비통제』 제21집(국방부, 1997).
- 임동원, “남북 고위급회담과 북한의 협상전략”(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6).
- 임재형, “북한 외교정책 결정 과정의 특징과 군의 역할: 김정일 시대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6권(2002).
- 정성임, “1998~2007년 로동신문 분석을 통해 본 북한의 선군정치 논리,” 『통일문제연구』, 제52호(2009).
- 정영태, “북한의 대남 협상행태 분석,” 『한반도 군비통제』 제39집(국방부, 2006).
- _____, “제3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결렬 배경과 전망”(통일연구원, 2006).
- _____, “북한의 대남 군사적 위협 배경과 우리의 대응”(통일연구원, 2009).
- 진희관,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 10년의 평가와 전망,” 『통일경제』(현대경제연구원, 2007).
- 통일연구원, 『북한의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 개최배경과 전망』(통일연구원, 2007).
- _____,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회고와 평가』(통일연구원, 2012).

홍관희,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국의 대북 협상전략,” 『협상연구』, 제6권(2001).
홍양호, “탈냉전시대 북한의 협상행태에 관한 연구”(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_____, “북한의 협상행태 연구의 분석틀 모색,” 『통일문제연구』, 제32호
(1999).

황진환 외, “1990년대 이후 남북 군사 분야 회담 연구: 패턴과 정향,” 『통일정책연구』, 제19권(2010).

3) 기타

문성묵 면담.

3. 국외 자료

George, Alexander L., “Strategies for Crisis Management,” in Alexander L. George(ed.), *Avoiding War: Problems of Crisis Management* (Boulder: Westview Press, 1991).

Pruitt, Dean G., “Strategic Choice in Negotiation,”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27, no. 2 (Nov. 1983).

Joy, C. Turner, *How Communists Negotiate*(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55).

Wall Jr., James A., *Negotiations: Theory and Practice*.

Lewicki, Roy J. and Litterer, Joseph A., *Negotiation*.

Study on North Korea's Behaviors and
Negotiating Behavior Determinants at Military
Negoti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under the Kim Jeong-Il Regime

In the center of Talks between Defense Ministers and Military Talks
between Military Generals and Military Working Level Talks
between of North and South Korea

Lee, Sung-choon(Dongguk University)

In a situation that realistically, the Korean Peninsula is under a truce or suspension of fire and, in other words, the two Koreas have continued to be in a condition of unstable peace, it is estimated that the military talks between the two Koreas have made positive, although not satisfactory, contribution to peace and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by discussing on and making efforts for an easing of strained relations and confidence building such as preventing the recurrence of accidental armed conflicts, refraining from stimulating activities, and stopping mutual recrimination in order to prevent war from recurring.

Although currently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have come to a standstill, talks between the authorities of North and South Korea are expected to increase further in the future. Now is the high time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ed to prepare systematic countermeasures against such future negotiations because nothing gives so much significant impact on our society as a matter of North Korea.

As it is difficult to change military negotiations to general ones and each of the two Koreas has very different and distinctive position as to military negotiations, although there is a little bit of unreasonable things, it is judged to be meaningful to evaluate North Korea's behaviors and negotiating behavior determinants at military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in regard to the results of military negotiations which the two Koreas have had so far. Such assessment analysis made with reference to the contents of reports on military negotiations by 'Rodong Shinmun(Labor Newspaper)', the North Korea's typical representative newspaper to officially speak for its position towards foreign countries and 'Minju Josen', the mouthpiece of the North Korea's cabinet will enable us to make more close access to the more fundamental behaviors and negotiating behavior determinants at such military discussions although such evaluation was never attempted to make before due to lack of materials.

Therefore, this study has analyzed and assessed North Korea's behaviors and negotiating behavior determinants at the military talks under the Kim Jeong-Il era in terms of generality. Especially, study through the comprehensive analysis framework shows North Korea's

negotiating behavior at military talks with South Korea have been unchanged in terms of the primary determinants: North Korea's view, purpose, and strategy of negotiation, while the second determinants: North Korea's tactics, subject, and situation of negotiation have been changed by the primary determinants.

Keywords: Talk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s Defense Ministers, Military Talk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s Military Generals, Military Working level Talk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media's reaction to Military Talks, negotiating behavior determinants